

Weekly 공감

2009 07.15
No.20(통권 121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준법이 국력이다

한·EU FTA 진전 이룬 대통령 유럽 순방

인터뷰 녹색일자리 6만6천 개 만든 정광수 산림청장
"숲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뿌리"

'한국판 쿨 러닝'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훈련 현장

한승수 총리, 녹색성장의 미래를 말하다

노동부
Ministry of Labor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으로 일자리를 잃게된 근로자 여러분 노동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려운 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업 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 2년간 고용되었다면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무사실 및 기간 등이 확인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실직가정을 위해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연간 소득금액 2천4백만원 미만 (이율 3.4%)

■비정규직 실직자의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비어있는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월 30만원씩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디딤돌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를 제공해 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최고 200만원까지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해 드립니다
-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해 드립니다 (이율 3.4%)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바로 방문하십시오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1588-1919

법치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

강 경 근(숭실대 법대 교수 · 헌법학)

법치 확립은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이전 정부들이 1987년 헌정 체제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실현에 주력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한 헌정이 20여 년이 된 지금, 포퓰리즘적 민주가 대의정(代議政)을 기반으로 하는 법질서를 파괴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와 용산 사고, 그리고 판사들의 집단행동과 교수 시국선언 등은 그 연속선상에 있다.

법치국가의 요소인 정부, 공권력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민주는 헌법국가에서 국민 · 국가 간 소통의 정당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법과 질서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법을 통로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법치국가의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정부에 소통을 하라고 강요하는 최근의 시국선언과 행동들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금의 민주정부를 정통성에 흠결이 있었던 1987년 이전의 정치체제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세우려면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인식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책임을 묻는 온정주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당연히 범죄자의 개인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헌법적 근거도 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함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건 형사건 그 책임의 귀속 관계는 자기책임 내지 개인책임으로 하겠다는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특히 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왔다. 우리 사회가 법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현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 법치의 관건이 되는 불법 · 탈법적인 집단행동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용하게, 그러나 엄격하게 묻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한 공권력을 앞세운 우파 국가란 의미는 아니다. 공권력과 형벌의 책임 영역에 있어 헌법적 가치가 관철되는 헌법국가의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책임과 비용의 배분관계가 '각자 그의 것'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법치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시장경제적 법치이며 실용과 중용의 이념이다. 이런 법의식에 입각한 제도와 질서야말로 한 사회의 법치국가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G



정경택 기자

법치 세우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불법과 반칙으로 생기는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법치(法治)가 부실한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브랜드의 추락,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가 돼야 한다.

기획특집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정경택 기자



60



조영철 기자

12

Weekly 공감

발행일 2009. 7. 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19호(7월 8일자)에 실린 '한옥의 귀환 이끈 건축가 황두진' 기사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바람, 한옥 건축 아이디어는 물론 '소개된 한옥은 한옥이 아닌 것 같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한옥이 제일 멋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문화는 한옥의 멋과 향기를 너무 외면했으며 나라 모양도 안 예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인구정책의 일환이긴 했어도 대도시에 너무 집중된 빌딩문화…. 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과 결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_김윤희

"한옥과 양옥집 다 살아봤는데 한옥이 여름엔 너무 시원하고 겨울엔 양옥집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한옥의 문과 난방시설만 편리하게 고친다면 한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문이나 난방수단의 디자인과 재질은 한국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야겠지요. 문이나 창의 경우 이중문으로 만들어서 여름엔 얇고 통풍성이 뛰어난 한지문으로 닫고 겨울엔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한지를 개발해 그 한지문으로 닫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에 황토를 얇게 펴 바르고 양쪽으로 한지를 한 번 더 덧대 겨울문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요."_새침이

"제가 사는 마을에 전통 한옥이 세 채나 있어서 그런지 양옥과 합쳐진 한옥을 보니까 한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사진에 있는 한옥의 내부 모습을 보니까 정원이 없는 듯하네요. 한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있는 한옥들은 작지만 정원들이 다 있어서요."_선귀오

"참으로 멋스럽습니다. 제발 개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옛것들을 보존했으면 합니다."_지킴이

●● 〈Weekly 공감〉 19호 '정책 분석-우측통행 A to Z'를 읽고 독자들이 올린 댓글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우측통행을 하면 알파파가 증가한다니 한번 시도해볼까요~. ㅎㅎ"_두루누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 그어놓고 강박적으로 좌측통행 질서교육 시켰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좌측통행을 했는데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이제라도 바뀐다니 다행이네요. 좌측통행은 물론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도 잘못된 거라는 걸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_참숯

"전 왼손잡이라서 그냥 좌측통행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_신혜진

●● 〈Weekly 공감〉 19호 '중점 기획-서민생활 확 달라진다'와 관련해 한 독자가 격려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서민복지정책이 나름 좋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정부 욕만 하지 말고 어렵지만 파이팅합시다."_xntls

---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똑똑똑… 궁금합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동강 상류인 안동 지역에 하회보와 구담보 등 6월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지 않던 작은 보 2개가 추가 설치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자의 댓글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하려고 하는 보 때문에 안동 하회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 제대로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회마을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_레드정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같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안동·임하댐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 경우 수심이 안동 하회마을 인근에 만들어지는 하회보의 높이(3미터)보다 1~2미터 더 높아져 모래강변이 유실되는 것은 물론 하회마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하회보 등 안동지역 상류 2개 보는 고정된 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가동보(고무보) 형태의 임시 구조물로 물길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둔치가 잠기지 않으므로 하회마을은 물론 인근 모래강변도 잠길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회보와 구담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친수조성용(물놀이용)으로 조성해달라는 지역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을 뿐 아직 위치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 하회마을 강변 백사장 침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로 작은 보 2개를 만드는 계획을 당연히 중단할 것입니다.

공감 퍼즐

1	2	■	3		4
5		6		■	
	■		■	■	■
	■	7			8
■	■		■	■	
■	9			■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7월 2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미리 마련하여 갖춤. "출장 갈 OO를 끝마쳤다."
3. 학생들의 학업 성과 등을 점수로 매긴 순서. "행복은 OOO이 아니잖아요."
5.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말하죠. "대한민국은 OOOO다."
7.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늘어나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 모두가 잘살게 하려면 빨리 이것이 되어야죠.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것.
9. 취업 등에 필요한 나의 '신상명세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기에 오늘 그 회사에 OOO를 넣었다."

세 로

1. 법이나 규칙, 질서 등을 잘 지키는 정신. "그는 OOOO이 투철해서 항상 법을 잘 지킨다."
2. 마련하여 갖추어 둠. "도서관에 신간을 OO하다."
3.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성스러운 노래.
4. 국가원수 등이 여러 나라나 도시를 돌아가며 방문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유럽 3개국 OO에서 폴란드를 방문한 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스웨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무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6. 세계의 경제 환경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OOOOO이 향상된다."
8.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Weekly 공감〉 18호(7월 1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영산강 **3** 녹색관광 **5** 휴가 **6** 벌집 **8** 에코투어
세로 **1** 청색 **2** 영광 **4** 갯벌 **6** 휴양림 **7** 결코
당첨자
남현주(서울 은평구 응암1동)
손　선(전북 군산시 소룡동)
안소진(대전 서구 가수원동)
이동영(강원 속초시 동명동)
조은아(경기 시흥시 대야동)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돕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재산 3백31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국가원수의 재산 기부는 유례가 없는 일로 사회지도층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 송정호 위원장(가운데)이 7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방안과 절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감사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오른쪽은 이사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기부 재산은 3백31억4천2백만원. 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건물 3채와 부속 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백95억원), 그리고 이 대통령 명의의 개인 예금(8천1백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기부 후 이 대통령에게 남는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백만원)과 스포츠 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4억8천1백만원을 합한 49억6백만원이다.

3백31억4천2백만원의 기부 재산은 이 대통령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에 쓰인다. 주위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한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 및 소방대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일찍부터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 대통령 재산의 사회 기부를 위해 만들어진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송정호 위원장은 7월 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인설립 허가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난 대물림 끊겠다” 선의 존중해야

또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혜 대상자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학 및 복지사업의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마련되며,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9천여 만원, 1년에 11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당락에 관계없이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재산 기부를 발표한 후 7월 8일 오전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백20여 건의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소중한 결단’이라며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직 국가원수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덜 발달한 우리 사회에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를 계기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호 위원장도 “우리 사회에서 재산 기부가 갖는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연합

이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이명박 대통령 재산 현황

기부 재산		
부동산 (토지+건물)	서초동 1709-4	1백69억2천3백만원
	서초동 1717-1	1백28억3백만원
	양재동 12-7	97억7천5백만원
	부동산 관련 채무(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64억4천만원
예금		8천1백만원
합계		3백31억4천2백만원

잔여 재산		
부동산	논현동 단독주택	44억2천5백만원
회원권 등 기타 동산	롯데호텔 헬스클럽, 제일컨트리 골프클럽 등	4억8천1백만원
합계		49억6백만원

미국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채권(LKe뱅크 청산지분 30억원)은 제외한 금액.

이명박 대통령 재산 기부 일지

1995년 1월
국회의원 시절 저서 <신화는 없다>에서 "아내와 나는 우리의 전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처음 언급

2007년 7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재산 기부 시사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선거방송연설 통해 재산 기부 선언

2008년 12월
라디오 연설서 "어디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검토 중… 머지않아 방안 나올 것"이라고 언급

2009년 1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추진위원회' 구성

2009년 7월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 재산 3백31억4천2백만원 기부 공식 발표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에 즈음하여

오늘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을 맞아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제 삶의 한 단면이 정리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날이 언제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제 인생은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현대사가 빚어낸 드라마의 한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한민국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또 그 역동적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늘 이웃과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간 고등학교라도 꼭 가야 한다고 저를 이끌어주셨던 중학교 담임선생님, 주경야독의 고등학교 시절, 시장통에서 가게 앞에 좌판을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가게 아저씨, 일용직으로 일하는 저에게 책을 주시면서 대학 입학시험을 보라고 강하게 권유하셨던 청계천 헌책방 아저씨, 막상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자 등록금을 미리 당겨서 마련해주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학 4년간 일감을 주셨던 이태원 재래시장의 상인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대에 입사해 30대에 CEO가 되고, 열사의 나라에서 시베리아의 동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98명이 다니던 조그만 기업을 16만명이 다니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모시고 일했던 고 정주영 회장님과 동료들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기업을 떠나면서 저는 이미 그 생각을 굳혔고 <신화는 없다>라는 책에서 그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에게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준 것은 일과 삶을 통해 만난 분들과의 따뜻한 관계와 그것을 통한 보람과 성취였지 재산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일생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저의 재산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말 소중하게 사회를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침내 오늘과 같은 날이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일임했던 추진위원 여러분께서 저의 뜻과 정성을 잘 헤아려 재단을 설립해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정말 가난했지만 늘 남을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행동은 지금도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흔쾌히 동의해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확신하건대, 재산보다 더 귀한, 더욱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처한 위치는 달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로써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실한 소망입니다. 사랑이 없는 물질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5일

재단법인 청계 설립자 이명박

“사회적 책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평생 모은 재산 3백31억여 원을 한 장학·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사회 환원의 모범을 보였다.
이 일은 앞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DB

> “우리가 산업화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 이제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부가 그런 사회를 향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7월 6일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 3백31억4천2백만원을 청소년 장학·복지재단인 ‘청계(淸溪)’에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저서 〈신화는 없다〉에서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뒤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사회 환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그 약속을 마침내 실천에 옮겼다.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는 늘 주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도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본보기를 보인 재산의 사회 환원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와 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한편, 향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 스스로 소회를 밝혔듯, 기부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서로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른바 상생(相生)의 문화가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런 배려와 상생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반(反)기업 정서,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기부문화를 확산해나간다면 이런 장애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선진국처럼 부자가 존경받는 청부(淸富)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동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같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1퍼센트가 “사회를 위해 재산을 기부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우리의 관습, 장자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 부의 사회 환원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이런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선 기부자들을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재단법인 설립이나 조세 측면에서 기부를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부 우리 사회 소중한 이정표 될 것”

사회지도층 인사와 부자들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건강한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지금 당장 자산을 더 많이 쌓는 것이 큰 이익처럼 생각되겠지만, 훗날 부가 한쪽으로 기울어 사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면 모두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산업화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듯, 이제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행복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부가 그런 사회를 향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G

글 · 윤병철(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DDoS 방어

함께해요!

안전한 인터넷 세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월 7일 발생한 DDoS공격으로 인해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다수의 좀비 PC가 다른 PC나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악성코드를 진단·치료 할 수 있는 전용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ww.kcc.go.kr

KISA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www.kisa.or.kr

사이버테러 막는 것은 '보안의식'

DDoS 공격 대처 방안… 안전모드 부팅 후 전용백신으로 치료해야

7월 7일 시작된 디도스(DDoS) 공격은 공공기관과 포털 사이트, 은행, 개인PC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사이버테러의 피해 줄이기는 알고보면 간단하다. 최신 백신과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이트의 접속량이 실제 접속량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

2009년 7월 7일 오후 6시 20분 공격 1일째 청와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회, 네이버 등 주요 국가기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불통.

2009년 7월 8일 공격 2일째 국가정보원,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네이버, 다음, 파란, 시중은행 등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 공격 대상 확대 중.

2009년 7월 9일 공격 3일째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가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파괴. 본인 허락 없이 PC에 저장된 정보가 자동 삭제됐다는 피해 건수 1백 건에 육박.

얼굴 없는 사이버테러로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다.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포털사이트와 은행, 개인PC에 이르기까지 해킹 범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7 해킹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해킹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홈페이지 다운 정도로 호들갑을 떠느냐고 묻고 싶다면, 브루스 윌리스의 컴백 영화 〈다이하드4〉를 보길 권한다. 천재 해커는 국가 시스템에 침투해 교통체계를 무너뜨리고 주요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가스와 전기시설의 통제 권한도 빼앗는다. 해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 정보화사회의 허점을 노리는 무서운 존재다.

전국적인 해킹 사태가 사흘 연속으로 지속됐지만, 사이버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은 해커를 추적할 의미 있는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격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 디도스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이라는 고전적인 해킹 수법이 사용됐다. DDoS는 사이트의 접속량이 실제 접속량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다.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사이트 접속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급기야 다운된다.

이 공격에 위력을 더하는 것은 악성코드(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 PC'다. 영혼이 없는 좀비처럼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는 해커의 명령에 따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 접속 신호를 보내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데 일조한다. 악성코드는 무심코 열어본 스팸 메일의 첨부 파일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 PC가 되는데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사실을 모른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는 4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 해커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수만 명의 병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기술 전문 상담 제공

DDoS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안의식 자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첨단 인프라가 고전적인 해킹 수법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해킹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감염됐다고 예상되는 경우다. 이때는 PC 전원 스위치를 켠 후 F8키를 눌러 PC를



동아DB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는 4만 대가 넘는다고 한다.

안전모드로 부팅해야 한다. F8은 운용체제 등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실행시키기 때문에 악성코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 모드로 부팅한 후 PC 환경설정에서 날짜를 변경한다. 악성코드는 해커가 심어놓은 특정 날짜에 맞춰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신 백신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백신으로 치료해야 한다.

평소 보안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수칙으로, 첫째 윈도 운영체계는 최신 보안 패치를 모두 적용할 것, 둘째 인터넷 로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할 것,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액티브X 보안경고'의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고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을 것, 넷째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e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모두 삭제할 것, 다섯째 메신저 사용 중 URL이나 파일이 첨부될 경우 함부로 클릭하지 않을 것, 여섯째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보안 제품으로 검사한 후 사용할 것, 일곱째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 여덟째 외부 침입자가 나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유 권한은 '읽기'로 설정해 놓고 사용한 후에는 공유를 해제할 것, 마지막으로 보안 제품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의 PC가 좀비 PC가 된 줄도 모른다. 이번 공격에 동원된 좀비 PC는 4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 해커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수만 명의 병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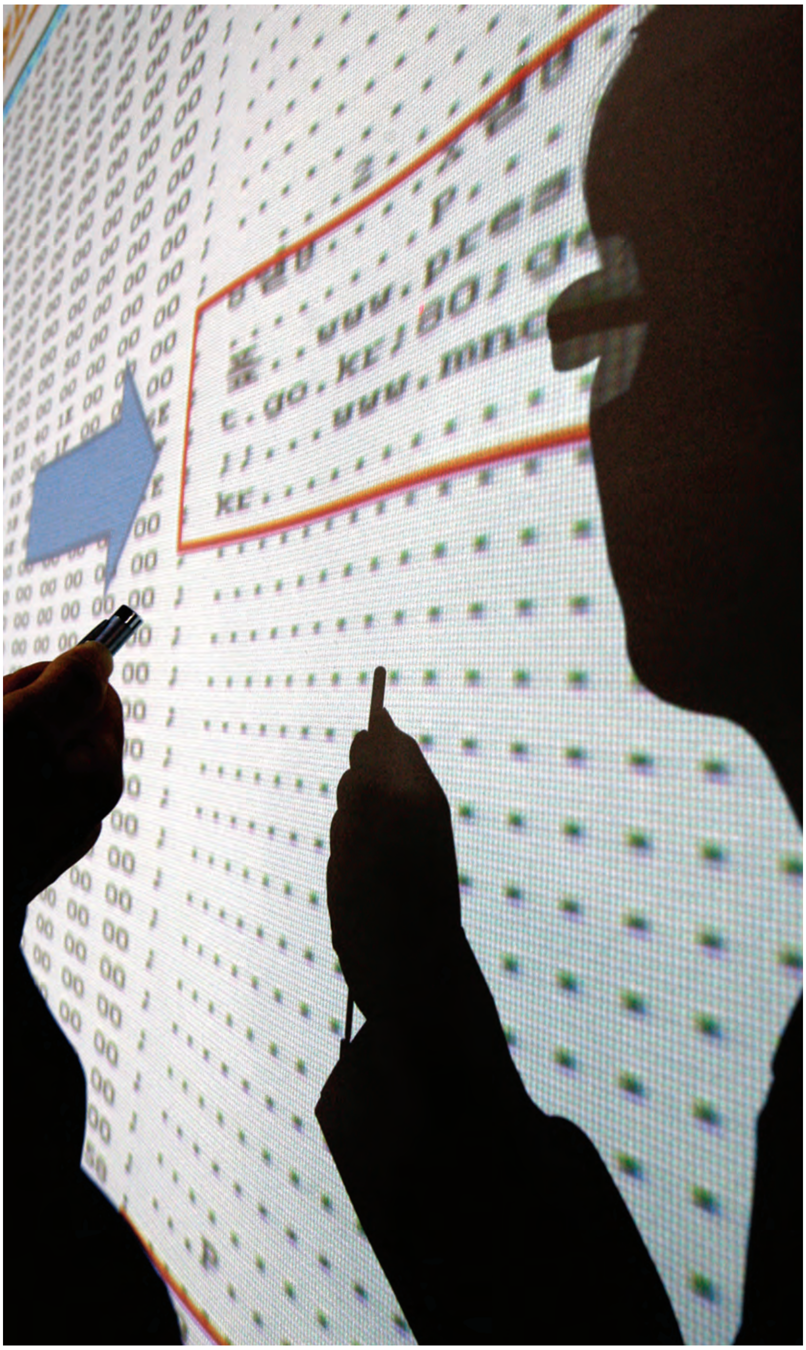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용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전문상담 직원의 도움(문의 국번없이 118)을 받을 수 있다. KISA가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 boho.or.kr)나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이스트소프트, 잉카인터넷 등에서 전용백신을 다운로드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인류는 사이버 전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아니라 각종 시스템 기반을 교란하는 사이버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 독일에서는 중국발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를 여러 차례 겪었다. 지난해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한 직후, 두 나라는 상대방의 주요 기관 사이트를 차례로 마비시키는 숨 막히는 사이버 전쟁을 벌였다.

오는 10월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희 전 의원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정보화 인력을 키우기 위해 '10만 해커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교란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이 공격을 막는 출발은 보안의식일 것이다. G

글 · 류현정(IT칼럼니스트)

동아DB



DDoS 사태를 계기로 IT 최강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보안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내 PC 지켜주는 백신 사이트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	www.boho.or.kr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안철수연구소 전용백신	home.ahnlab.com
하우리 전용백신	www.hauri.co.krl
바이러스체이서 전용백신	www.viruschaser.com
알약 전용백신	alyac.altools.co.kr
네이버 PC그린 전용백신	security.naver.com
잉카인터넷 전용백신	www.inca.co.kr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의 미래 달렸다"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이끄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한 총리는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처와 빠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뉴딜정책을 선택했다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은 후대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을 '유엔 기후변화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7월 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그동안은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어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G8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의 미래가 걸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약 1백5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는 평균 0.74도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만년 동안 온도 상승의 70퍼센트 이상이 산업혁명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세계

전체 탄소배출의 80~8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또한 벌채 등 토지이용이 잘못되어 배출되는 탄소는 15~20퍼센트 정도입니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상승했으나 지금 우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온도는 무려 6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 모임인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난 1백년간 1.5도가 상승했고 2020년까지는 1.2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지난 1백년간 2도 상승했습니다. 날씨 변화로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농작물도 기후변화에 적응해 생산지가 북상하고 있고 해양생태계에도 냉수어 대신 난류성 어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환경과 성장의 공존… 녹색성장정책의 요체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열린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Earth Summit)입니다. 이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하여 21세기 말 평균 온도 상승을 약 2도 정도에서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교토의정서(2008~2012)가 합의됐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탄소감축의무국을 '부속서 1국가'라 하고 이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퍼센트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끝나고 나면 2013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질서가 있어야 하기에 국제사회는 계속 의논 중입니다. 그러한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UNFCCC 당사국 회의입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3~2017년간 협약이 결정되어야만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 2013년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9월 22일 유엔에서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의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한국이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고 선·후진국 간의 조정역할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후속조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놓은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작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화한 것이 올 1월 초에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양적 성장전략에서 질적 성장전략으로 바꾸자는 발전전략의 일대 전환,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린뉴딜정책에서 '그린'은 녹색정책입니다. 본래는 '그린'정책만 추진하려 하였으나 작년 9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뉴딜'정책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잘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와 비교하여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의 경제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뉴딜정책을 함께 포함한 합성정책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전자는 공급위주의 신고전학파적 경제정책이고, 후자는 케인스학파적 수요창출정책으로서 녹색뉴딜정책은 두 가지를 합성한 유례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경기가 좋아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회복되면 뉴딜정책 부분은 자연스레 정리되면서 그린 부분만 남아 녹색성장정책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연합



북극과 남극의 빙산을 녹이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양적 성장전략에서 질적 성장전략으로 바꾸자는 발전전략의 일대 전환,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정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정책입니다. 첫째, 과거의 성장은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이 개발계획은 7차까지 계속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계획을 바탕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했고, 그 중심에 있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

본입니다. 이 두 요소의 외연적 성장은 외연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장은 항상 환경과 대치적(Trade-off)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률이 오를수록 환경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성장률을 좀 줄이더라도 생활의 질, 환경을 살리자 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론자와 환경론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돼왔습니다.

그런데 질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s)라든가 비약적 혁신(Transformational Innovations), 최신기술(State-of-the-Art Technology)입니다. 이것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게 하면 과거와 같은 외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연적,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성장과 환경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녹색성장은 저탄소성장이므로 국제무대의 기후협상에서 우리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므로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전략의 요체이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4,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9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금수강산 되찾기 노력

그러면 이 같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술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17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녹색기술산업, 혁신적 기술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을 연구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명박 정부는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질적 성장, 녹색성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고 세계경제사에 새 장을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1, 2년 안에 끝나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 경제가 이 녹색전략을 토대로 성장하도록 틀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기틀을 잡고 고도성장 경로를 거쳐 여기에 이르렀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은 앞으로 50년 이상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 '4대강 살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벌거벗은 산을 1960~1970년대에 걸쳐 푸르게 하여 전 세계에 '산림녹화'를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연인원 4억6천여 만명이 산을 찾고 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다면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강은 어떠합니까? 소년 시절 북한강가에서 자란 저는 강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문화와 전통이 깃든 강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을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매우 드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죽은 강을 다시 살려 온 가족이 함께 산뿐만 아니라 강도 즐기도록 하고 생태계를 본래대로 복원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산림녹화'에 더하여 '하천청화'로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되찾아 놓자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본래 뜻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잃어버린 강의 생명력을 되찾고 녹색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에너지 수출국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97퍼센트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 2차 석유파동 때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자원 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유가 배럴당 1백50달러 가까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1천4백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4천억 달러였으므로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어려움에 당면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출국이 되자고 결심하였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원자력 수출전략입니다.

제가 올 4월에 하노버 박람회 참석차 독일에 간 길에 막스프랑크연구소 소장인 그루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가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개발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은 이 시점에서 원자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원 '원자력' 수출 전략 세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1978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왔고 기술을 향상시킨 결과 1980년에 원전 국산화, 1990년대에 처음으로 OPR(Optimized Power Reactor)라는 1천 메가와트(100만킬로와트) 용량의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으며, 2002년 이를 개량해서 1천4백 메가와트(1백40만킬로와트) 용량의 APR(Advanced Power Reactor)를 개발하여 현재 신고리에서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원자로입니다. 어느 나라의 원자로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뛰어나고 58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한데 이렇게 짧은 기간 원전의 건설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원전을 가지고도 전혀 수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주종 수출품화해보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수출정책의 골격입니다.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가던 중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들러 왕세자와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1천4백 메가와트짜리 원전 4개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경제성장과 관련한 노력은 10년, 20년 후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에너지 수출국 지향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전, 프랑스 아레바 그리고 일본의 히다치-GE 등 3개 컨소시엄이 현재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 1기에 50억 달러이고 16년 동안 운영을 해주면 추가로 1기당 50억 달러의 수입이 생기는 총 4백억 달러 상당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올 7월 말 2개 회사가 선정되고 오는 9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0년, 20년 후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장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에너지 수출국 지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잘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G

정리 · 박경아 기자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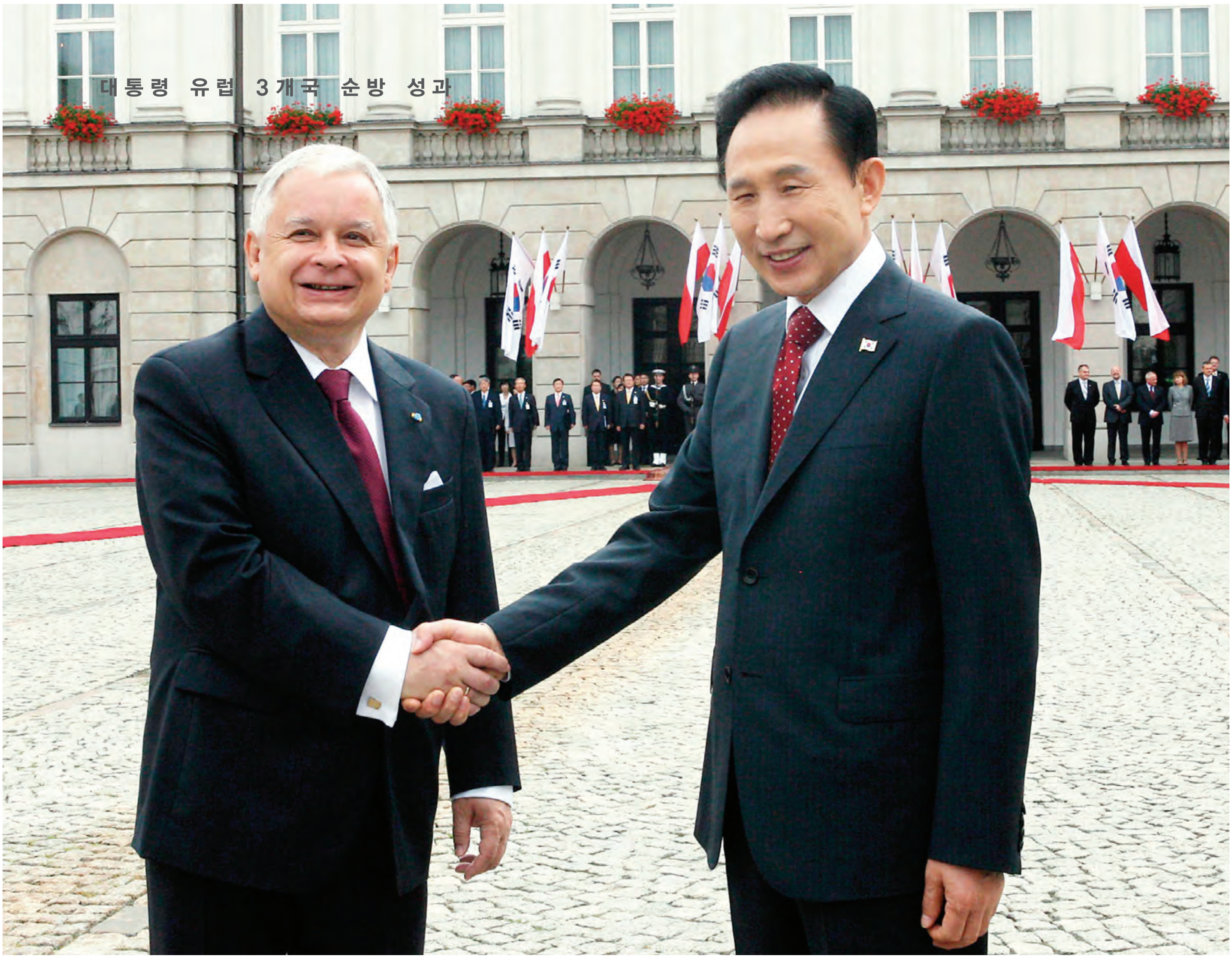
미국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 민간 주도의 상용화 전략
일본	탄소 절감기술 육성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강화
영국	2008년 '그린혁명계획' 수립 2050년까지 영국을 '탄소 제로' 국가로 개조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최우선 정책순위로 선정 여러 부처 환경 분야 업무를 통합한 거대 환경부처 출범
독일	1990년대 후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중국	2050년까지 세계 최대, 최고의 저탄소 기술국으로 거듭난다는 구상 아래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녹색성장 이끄는 대한민국 CGO 한승수 총리
(Chief Green Officer)

한승수 국무총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차에 걸친 특강을 비롯, 많은 자리에서 '녹색성장 홍보 전도자'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한 총리는 녹색성장전략의 중심축인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천여 명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중견공무원 2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했으며, 녹색성장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외 여러 자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환경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해온 한 총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왼쪽)으로부터 한·EU FTA 지지를 이끌어냈다. 7월 8일 정상회담 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악수하는 두 정상.

이명박 대통령 G8 외교 성과

폴란드, 한·EU FTA 지지로 돌아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지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총력외교가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유럽 3개국을 순방,
각국 정상들과 만나 조속한 FTA 타결의 필요성을 설득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큰 고비를 넘었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유럽 3개국을 순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현지 시각)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한·EU FTA 체결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 한·EU 양측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안을 만든 상태이며, EU 회원국별로 수용 여부를 놓고 마지막 점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그동안 이탈리아, 헝가리와 함께 한·EU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초반부터 한·EU FTA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FTA가 체결되면 폴란드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폴란드를 EU와 러시아로 통하는 수출 관문이자 전초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폴란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폴란드는 2008년 기준 교역액이 44억1천만 달러(수출 41억1천만 달러, 수입 3억 달러)에 이르는 중·동유럽 최대 무역국이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투자한 규모만 해도 올해 3월 기준으로 14억8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LG, SK 등 1백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LCD, 전자, 화학 등 첨단직종에서 2만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카친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부사항에 있어 합의해야 할 게 있겠지만, 한·EU FTA 체결이 양국 간 경제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양국 실무진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카친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부정적이었던 폴란드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며 “아직 고비가 남아 있지만 한·EU FTA 타결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폴란드의 경우 경제 분야는 총리와 내각이 결정하는 체제다. 따라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설득도 중요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폴란드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한·EU FTA를 통해 양국 사이에 더욱 활발한 투자와 교류증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도 “‘외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번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의 정서적 유대감이 한국의 폴란드 투자를 견인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투자환경이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투스크 총리 역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LNG,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LNG터미널 (4억 4천만 유로 추정),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폴란드가 추진 중인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폴란드 측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한 군사·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 협력 확대키로

폴란드와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1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이에 양국 정상은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 도시 라퀼라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기간인 7월 10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한·EU FTA 타결의 중요성을 집중 설득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13일엔 EU 의장국을 맡게 된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총력외교를 펼쳤다. 한·EU FTA에 대해 부정적인 또 다른 국가인 헝가리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별도로 설득의 특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G8, 李대통령 제안 ‘MEF 워킹그룹’ 채택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F) 워킹그룹(실무작업단) 구성’이 G8 확대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에 의해 즉석에서 수용돼 우리나라가 ‘녹색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이 대통령은 7월 9일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MEF에서 “기후변화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대처하려면 재원과 기술 이전에 관한 원칙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MEF 참여 국가들이 실무 차원의 작업반(워킹그룹)을 만들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MEF 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즉석에서 제안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앞서 재무장관들이 모여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문제를 세밀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 또 유엔 특별기후정상회의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관련국 실무자 간의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7대 전환적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개발 선도국가로 지정됐다. MEF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태양광, 탄소 포집 저장기술(CCS), 에코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고효율 및 저탄소 석탄기술 등을 ‘세상을 바꿀 7가지 기술’로 선정했다. 각 기술 개발을 주도할 국가로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한국을 비롯해 일본은 에너지 효율, 독일은 태양광, 호주는 CCS,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선정됐다. 에코 자동차와 고효율 및 저탄소 석탄기술은 선도국가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 개발 선도국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한국은 스마트 그리드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불법 업로딩이 창작을 죽인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과 누리꾼(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과 창작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알자. 개정 저작권법은 바른 온라인 유통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이자 국민 문화생활을 위한 기본 안전장치다.


동아DB

매년 4월 24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7월 23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 정지 명령제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다. 일부 누리꾼은 블로그에 올라 있는 음악, 사진 등 게시물을 모두 지운 뒤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심지어는 구글 등 해외 사이트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를 제기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최근 다섯 살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동영상물이 인터넷에 게재됐다가 권리자의 요청으로 삭제되자 저작권법이 권리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불만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개정 저작권법이 비판적인 포털이나 게시판에 재갈을 물리는 '인터넷판 집시법'이 될 것이라는 '괴담' 수준의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한마디로 '온라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영리 목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의 신설이다. 정부는 헤비 업로더나 불법적인 상업용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동아DB

개정 저작권법은 일상적인 인터넷 생활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와 제작물 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법, 상습적 불법 유통업자에 철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제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제나 부담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이용의 불법 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터넷 생활이 현재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정과 게시판에 대한 정지명령제 도입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유통업자를 단속한다. 그러므로 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 상업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 유통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활동 과정에서 자칫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삭제 요청이나 고소 등을 당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제나 부담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저작물 이용의 불법 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터넷 생활이 현재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저작권법이 권리자 보호에 치우친 결과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이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에 큰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창작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또한 존중돼야 한다. 특히 만인이 공유하는 인터넷상에서는 사소한 업로드 행위 하나가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 측에서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소권을 남용하는 행위 또한 문화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손수제작물(UCC) 만들기 등 비영리의 단순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2008년 10월 10일)돼 있다.

저작권법 개정이 비판적인 포털이나 게시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법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창작이나 표현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 내용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비영리 단순제작물 보호대책도 마련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로 그만큼 가치중립적이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 조항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흐르는 강물은 모두가 나눠 마셔야 하듯 문화의 핵심요소인 저작물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합리적인 유통과 이용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소극적인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화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천 또한 보호돼야 한다. 저작권법은 우리와 미래세대가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G

글 · 김진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저작권 보호체계

주체	목적	보호법익	대상	법적 수단	성격
권리자	저작권리 보호	개인적 법익	일반이용자 불법유통업자	민사소송 형사고발	친고제
정부	유통질서 유지	사회적 법익	상습 불법유통업자	형사기소 계정 · 게시판 규제	비친고제



강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회복의 강
녹색성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창조의 강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와 만나는 소통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시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기획특집



법치 세우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정경택 기자

몸에 밴 무단횡단, 지정구역 외 불법 주차,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를 점령한 가판대, 어린이놀이터의 애완견….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 일상에 밴 무질서의 흔적들이다. 일상에 잠복한 무질서는 좀 더 큰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로 확산된다. 어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어린 청소년들까지 불법 다운로드에 물든다. 시위는 폭력으로 치달으며, 법을 만드는 당사자인 국회의원까지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법을 어긴다. 불법과 반칙. 2009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생기는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법치(法治)가 부실한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브랜드의 추락,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지금부터라도 바른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가 돼야 한다.



거리를 점령한 불법 가판대와 입간판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지적되는 무질서 사례들이다.

불법 다운로드 만연, 매 맞는 경찰, 폴리스라인 넘는 국회의원…

위기의 대한민국 해결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질서와 무법이 번지면서 사회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마저 뒤흔들고 있다.
법치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 그 속을 들여다본다.

#1 지난 6월 28일 새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폭력조직원들에게 30여 분간 집단구타를 당했다. 두 경찰관 중 한 명은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지난 3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이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인근에서 서울 혜화경찰서 최 모 정보과장을 폭행하고 지갑까지 빼앗았다. 경찰이 매를 맞는다. 경찰관이 범인에게 피격당한 건수는 2004년 2백31건에서 2008년 4백65건으로 2배나 늘었다. 시위진압으로 인한 공상(公傷)도 2004년 36건, 2005년 27건, 2006년 63건, 2007년 19건이던 것이 2008년 48건으로 증가했다.

#2 인기그룹 '빅뱅'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웹보드'에서조차 '톱 랭커'였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4월 불법복제물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빅뱅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순위인 웹보드 차트에서 8천8백3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보호센터가 4월 27일부터 '2009 서울클린 1백일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고속도로휴게소 등지에서 불법복제 DVD와 CD, 게임소프트웨어 등을 단속한 결과 DVD의 경우만 4월 3만7천3백34점, 5월 6만5천9백88점을 적발했다.이 가운데는 〈엑스맨 탄생: 울버린〉 〈노잉〉 등 국내 개봉 외화도 있었지만 〈12라운드〉 〈피스트 오브 러브〉 등 미개봉 외화도 있었다.

#3 지난 6월 9일 민주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은 '6·10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광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무시하고 들어가 1박2일간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8일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을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부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올 3월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질서 회복'

정경택 기자

현재 우리 사회의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은 이 지경이다. 무질서의 작은 시발점을 의미하는 '깨진 유리창'은 이미 온 사회에 파급돼 있다. 매 맞는 경찰 얘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에서부터 사회의 어른이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무심하게 불법과 탈법을 오간다.

일상생활에서의 '깨진 유리창'은 언급하는 것조차 번거로울 정도다. 특히 길거리는 무질서의 집합소와 같다. 아침이면 거리의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 오물을 치우느라 허리가 휜다. 도로 위에서는 무단횡단, 차선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이 수두룩하다.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학교 앞 '스쿨 존'에서도 질주하는 자동차들, 인도 위에는 오토바이가 내달리고 도로에 가판을 세운 노점상들은 당연한 듯 장사를 하고 있다.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 현수막도 모두 거리의 불청객들이다.

온 국민이 가장 무심하게 저지르는 무질서가 불법 다운로드다. 돈 내고 정품 구입하면 바보가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무감각은 심각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례는 2006년 1만9천80건에서 2007년 2만5천2백71건, 2008년 9만1천6백83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2006년 6백15명에서 2008년 2만3천4백87명으로 무려 38배나 늘었다.

대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무질서와 불법이 만연하는 것일까.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8퍼센트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대로 하면 손해 보니까'(33.5퍼센트),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24.1퍼센트)라고 답했다. 법대로 살면 손해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무질서와 불법을 양산하는 것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는 66개국 중 중간인 30위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인 75점으로 OECD 국가 평균 90.3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 불법시위를 통한 의견 수용률은 42.4퍼센트로 합법시위(28.2퍼센트)보다 2배가량 높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낮고 불법 시위가 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은 법적인 갈등해결을 선호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려대 윤인진 교수(사회학)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퍼센트"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응답자의 35.5퍼센트가 답한 '계층 간 갈등'이었고 다음이 지역 갈등(22.7퍼센트), 노사 갈등(19.7퍼센트) 순이었다. 반면 갈등 조정 방식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는 29.5퍼센트 △사기업이나 사적기관 관련해서는 35.2퍼센트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9.8퍼센트만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낮은 것이다.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 무질서와 불법 부추겨

윤 교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공익을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 전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 보고서'에서 드러난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감소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위치를 한눈에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은 26억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1퍼센트나 줄었다. 세계 순위는 47위에서 60위로 밀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월 20일 발표한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FDI(52위), 노사관계 생산성(56위)은 최하위권이었다.

올 1월 신설된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지만 국가브랜드 가치는 33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도시가 경쟁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가치는 도쿄의 20퍼센트에 그쳤다. 갈

정경택 기자



미래의 법질서를 좌우할 어린이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모의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연합

도로변 벽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왼쪽). 경찰에 연행되는 미국 하원의원.

은 제품을 만들어도 일제는 1백39달러에, 우리나라 제품은 1백 달러에 팔리는 상황이다.

국민이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사회지도층, 특히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KDI가 2006년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지수가 3.2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지수 4.0을 밑돌았던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외국자본 투자 줄고 국가경쟁력 떨어져

스스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 대화보다는 농성과 몸싸움에 능한 폭력적 정치행태에 익숙한 우리 눈에 얼마 전 미국에서 하원의원들이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연방 하원의 존 루이스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5명은 워싱턴DC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루이스 의원 등이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어 수단대사관 쪽으로 다가갔고 경찰은 주저 없이 루이스 의원 등의 손을 노끈형 플라스틱 수갑으로 채워 연행했다. 체포되는 의원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6월 24일 법질서 글로벌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우리 사회 각계에 드리는 제언'을 통해 "사법기관과 법집행기관은 사회 일각에 불법행위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 집단행동, 사이버테러 등 기초질서 저해행위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권력과 금력의 예외를 없애고 타인과 사회에 원인을 돌리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소한 불법이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질서 확립은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요소다. 법질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고 경제성장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차문중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은 "세계 주요 국가의 법질서 수준과 경제성장을 비교해보면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법질서 수준이 극히 낮은 국가가 겪은 경제위기는 평균 2.3회였지만 법질서 수준이 높은 국가는 0.4회에 그쳤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때 법질서가 안정된 나라의 경제성장이 더 빠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한번 경제성장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즉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구비하고 투명성,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던 속성이 굳어져 절차와 법을 어기고 개인과 집단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법치 회복을 위해서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특정 세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법리대로 풀어나가 민주사회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법질서밖에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 인터뷰

"헌법 위 떼법 이젠 사라져야"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우리 사회.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이런 세태에 반기를 들며 법과 원칙이 살아야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강조한다.



조영철 기자

김성호 이사장은 "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법질서 회복 전도사'로 통하는 김성호(59)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대개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으로 가는 데 비해 김 이사장의 선택은 달랐다. 그 이유로 그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들었다.

"선배 얼굴을 봐서 형량을 낮춰주는 전관예우 관행은 옳지 않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업무를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시절 못다 이룬 포부를 펼치고 싶기도 했다고 한다. 법질서 회복과 친기업적인 법률 환경 조성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터라 1년 만에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하고,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안정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치의 확립과 더불어 기업이 잘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어요. 마침 퇴임하던 때 법무부 직원들이 '김성호의 행복세상'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 이희범 전 대한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공익재단 '행복세상'은 2007년 12월 창립했다. 법질서 회복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완화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목적 아래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법질서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는 그 일환이다. 지난해 5월 1회 국제 컨퍼런스에 이어 올해 6월 24일 제2회 국제 컨퍼런스도 성공리에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경제위기와 법질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담은 '오프라인상의 법질서',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 및 책임을 논의한 '온라인상의 법질서' 그리고 '법질서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법질서 확립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법질서 강조가 국민 권리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김 이사장은 "법질서는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법질서를 유지했다면 지난 10년간 매년 1퍼센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을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자료를 인용했다.

또 "부패 통제와 법치 강화가 없다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카우프만 연구원의 말도 덧붙였다. 불법시위로 인해 노사관계의 생산성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법치의 부재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선 지나친 법질서의 강조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양보는 필요합니다. 물론 법치를 빙자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의 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법 경시 풍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노사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두드러지는 소위 '떼법'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역사적 배경을 들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 그리고 이어진 군사독재가 법과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여기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원칙과 절차를 경시하고 편법을 용인한 고도성장시대의 문제도 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졌어요. 민주화가 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선진국 대열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로를 점거하고 각목을 든 불법시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회지도층의 잘못도 큽니다.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불법은 묵인하면서 아래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사회지도층의 부패에는 더욱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첫째로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들었다. 크건 작건 불법을 저지른 이상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법집행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배후에 있는 사람이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을 한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는 건 안 된다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규를 만들고 이를 예외 없이 집행하는(Reasonable law, No exemption)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글로벌 컨퍼런스가 끝나고 채택된 '우리 사회 각계에 드리는 제언'에 잘 드러나 있다. 제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시급한 민생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것과 사회지도층의 비리 엄정 처벌, 무관용 원칙의 천명, 모호한 법 규제와 과잉규제의 개선,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이 담겨 있다.

김 이사장은 '법치를 세우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요, 일류 선진국가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법질서의 강조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회의 안정과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양보는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법치주의를 빙자한 권력 남용이나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설득과 대화로 접근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전에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있었지요. 과거엔 반민주의 내용이 독재였다면, 이젠 불법과 무질서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치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돼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겁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김 이사장의 바람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경제위기와 법질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나불법 씨의 불법투성이 하루’

혹시 내가 ‘깨진 유리창’?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온갖 불법행위를 생활수칙처럼 ‘엄수’하는 ‘나불법’ 씨의 일상은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의 표본이다.



정경택 기자

나불법 씨는 출근길에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온갖 교통법규를 위반한다.

정보통신회사 영업사원 나불법 대리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불법 다운로드가 취미인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컴퓨터부터 켠다. 최신 영화와 음원을 무상으로 내려받아 ‘감상’하느라 날 새는 줄도 모른다.

불법 다운로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대리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를 무사히 끝낼 때마다 큰일을 해낸 듯 우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허구한 날 새벽녘까지 불법 다운로드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 온정신 씨가 “그렇게 일하면 벌써 부장 됐을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고 연신 바가지를 긁어도 듣는 둥 마는 둥이다.

동이 터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온 아내 온 씨. 다운받은 영화를 보다 지쳐 컴퓨터를 켜놓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잠든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힌다.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급기야 그녀,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당신은 내가 아니라 컴퓨터와 결혼한 사람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온 씨가 짐을 싸자 정신이 번쩍 든 나 대리는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다운받지 않을게.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래?”하고 슬며시 꼬리를 내린다. 저자세로 나오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온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며 짐을 풀고 다시 아침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미 불법 다운로드가 삶의 일부가 돼버린 나 대리의 버릇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까.

식사를 마치고 모처럼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겠다며 나선 나 대리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 이상으로 쌩쌩 달린다. 그러다 건널목을 건너는 한 학생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만 이미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뒤다. 다행히 길을 건너던 학생도, 차에 타고 있던 아들도 다치지 않았지만 나 대리는 이마에 가벼운 상처가 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급제동을 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교통신호? 이까짓 것쯤 안 지키면 또 어때’

급한 대로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나 대리는 근처 약국에서 반창고와 약을 사서 응급처치를 하고 회사로 향한다. 순간 ‘지각하면 벌금 1만원’이라던 상사의 말이 떠오른다. 지각만은 면하기 위해 교통신호 위반, 불법 U턴, 차선 끼어들기, 과속 등을 총동원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근시각보다 10분이나 지난 상황. 온갖 핑계거리를 찾던 나 대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아, 부장님. 출근길에 그만 접촉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쳤지 뭡니까? 지각을 안 하려고 잠도 일찍 잤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으니 다행이군. 그런데 나 대리, 자네 요즘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좀 더 열심히 뛰게.”

상사의 다그침에 나 대리는 “거래처에 나가보겠다”며 회사를 빠져나와 담배를 피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가려니 어느 거래처부터 가야 할지 막막하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다들 이미 선약이 있단다. 하는 수 없이 나 대리는 평소 하던 대로 사우나로 달려간다. 그 사이 나 대리가 연달아 피운 담배꽁초들은 길바닥에 나뒹군다.



일러스트 · 이우정

사우나에서 부족한 잠도 보충하고, 몸도 말끔히 씻은 나 대리의 다음 행선지는 PC방. 아내의 눈치가 보여 당분간은 집에서 즐길 수 없게 된 취미생활을 이곳에서 만회할 요량이다.

오후 5시쯤 PC방을 나와 열심히 일하고 온 듯 헐레벌떡 회사로 들어간 나 대리. 자신이 한 일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거늘 휴대전화도 꺼놓고 종일 어딜 갔다 오느냐. 급히 부를 일이 있어 이미 여기저기 다 연락해봤다"는 부장의 '선제공격'을 받은 나 대리는 숨이 턱 막힌다.

"아빠도 만날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날 저녁 '또다시 근무를 소홀히 하다 들통 나면 자진 퇴사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쓴 나 대리는 홧김에 단골 포장마차에서 술을 잔뜩 마신다. 만취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때문에 손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나가자 주인은 가까스로 그를 달래 내보낸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나 대리는 지나가는 행인에게까지 시비를 건다. 휘청거리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를 아무도 따뜻하게 받아줄 리 없다. 그러던 중 그는 불현듯 신호가 온 신체반응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마차 인근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한다.

그때부터 정신이 몽롱해진 나 대리는 어떻게 대리운전기사를 만났는지, 요금은 얼마나 지불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눈을 떠보니 집 안방이다. 그런데 거실에서 나는 아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아이를 붙잡고 야단치는 소리다.

"왜 못된 짓만 골라 하고 그러니? 숙제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하면 어떡해! 과자를 먹고도 부스러기는 아무 데나 버리고, 학교에서도 만날 떠들고 질서도 안 지킨다고 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

"아빠도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저만 나무라세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제가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아이의 말이 매섭다. 거실에 있던 아내 온 씨도, 안방에 누워 있던 나 대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던 나 대리는 처음으로 지난날을 가슴 깊이 반성해본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깨진 유리창 이론(The Broken Window Theory)'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제자인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 처음 소개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사소한 불법행위를 일삼다 보니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어느새 회사생활도 가정도 엉망이 된 나 대리. 아들의 충격 발언을 계기로 그는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G

글 · 김지영 기자

법무부 "약자 보호 · 준법교육에 총력"

법질서 확립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체험 법교육 강화, 현실에 맞는 법령 재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경택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대전에 솔로몬 로파크를 열고 '어린이 법탐험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기본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라고 규정한 바 있다. 법질서 준수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며,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복원, 법질서 확립, 민생 안정 적극 지원, 부정부패 엄단,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른바 '떼법' 즉 불법 집단행동을 용납해온 잘못된 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파악하고, 법질서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잘못을 저지른 이상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 시위나 집회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성숙한 법치는 사회지도층의 준법과 법 인식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액의 5배를 무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법치국가야말로 선진국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를 법질서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법질서 캠페인과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인기그룹 '빅뱅'을 '법질서 홍보대사'로 선정한 것도 국민들의 냉소적인 법 인식을 제고하고, 좀 더 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가정헌법 제정 이벤트를 열어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캠페인이 단기적 과제라면, 법교육은 장기적 과제다. 준법 풍토 조성을 위해 법무부는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법 관련 내용을 확충하고, 학생자치법정 등 법교육 시범학교와 방과후 법교육 강좌를 1백30개 이상 운영하고 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생활법 경시대회 등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대전에 설립된 솔로몬 로파크를 활용한 '어린이 법캠프'도 각광받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에는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 10만명 이상이 방문해 준법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령 정비에도 역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하면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가 개선안을 내놓거나 제정한 법률은 소수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 도입,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이 그런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정헌법 공모전' 등 다양한 캠페인 전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현실을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 최태섭 사무관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와 부패 및 반칙의 만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이 키워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법질서 바로 세우기는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4월 19일 발족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2012년에 법질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 아래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손을 잡고, '법질서 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66개국 중 30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법질서 지수를 3단계 계획이 끝나는 2012년까지 9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소년들 사이에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그룹 '빅뱅'을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법에 무관심한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한 생활 곳곳에 숨겨진 법에 관한 미담을 발굴해 소개하는 '제2기 법사랑 서포터즈'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제1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성공리에 치렀다.

올해 첫 시작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 목표와 가치 등을 담은 문구를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예쁜 액자로 제작해 보내주는 것. 가정헌법 조항을 직접 만들고 지키며 가족 간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법의 소중함도 함께 전하자는 취지에서다.

초중고교 '법교육 시범학교' 지정

체험 법교육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법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교육 시범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 '법체험 학교' 등이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두발 불량과 같은 경미한 교칙 위반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해 동료 학생들을 심리, 변호, 재판하는 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 법정에서 유래했다. 전국 35개 중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해온 경기 고양시 행신고등학교의 이대성 교사는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추궁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과 질서를 체득하게 되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는 법무부 발간 교과서인 '함께하는 법 이야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사법기관 견학과 모의재판도 실시한다. 망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등 서울지역 22개 초중고교에서 운영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법질서 홍보대사로 인기 스타 빅뱅을 선정해 법에 대한 친근감을 높였다.

동아DB





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는 체험 중심의 법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으로는 '법률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아래).
법무부는 다양한 법교육 교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중인 '법체험 학교'도 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10차의 체험 중심 법교육, 변호사와 함께하는 모의재판 등을 실시한다.

또 어릴 때부터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법탐험 캠프'도 열고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캠프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천5백명 이상의 어린이가 신청해 4백명이 수료했다. 참여자가 많아 올해부터는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운영 중이다. 이 밖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모의재판 경연대회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법무부 법교육팀 윤일중 사무관은 "초등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인 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법을 접한다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맞춤형 법교육 교재 보급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월 출간된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지난 2월 출간된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두 권을 비롯해 법교육 교재 16권 등 총 36종 45만 권이 발간돼 보급됐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 대상 법교육도 활발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가 대표적이다. 생활법률 강연을 국악 및 클래식 연주 등 문화공연과 접목해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 정보를 체득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매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로스쿨 학생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대상자를 상대로 '법교육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고려대 로스쿨과의 업무협약을 시발로 부산대, 전북대 등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전국 25개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범죄피해구조금 개선,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재정비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냉소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를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채권추심법'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가 추진해온 공정채권추심법은 서민을 울리는 고리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채권추심법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다양하게 규정,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즉 앞으로는 전화, e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 협박 행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실제 빌린 돈보



동아DB

법무부는 초중고등학교 별로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고등학교의 학생자치법정.

다 현저히 초과한 돈을 청구하는 행위 등도 전부 규제받게 된다.

지난 4월에는 범죄피해구조금도 현실화했다. 1991년 마련된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의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해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1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2006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만1천6건이었는데, 구조금 신청은 2백3건에 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했다.

'인권 침해와 범죄 흉포화' 논란을 딛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발찌법'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시행 전에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범죄 흉포화 등을 근거로 들어 논란이 거셌지만,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0.46퍼센트(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19명 중 단 1명)에 머무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

글 · 정지연 기자

가정헌법 공모전 대상 최원준 씨 가족

"가정이 지켜야 할 원칙, 무지개에 담았어요"



법무부 제공

최원준 씨(사진 맨 왼쪽)는 "가정헌법 제정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성과"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무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상금 2백만원과 법무부 장관상을 받은 영예의 대상은 최원준 씨 가족의 '레인보 헌법'이 차지했다.

가족 모두가 직장인인 최 씨 가족은 '(제1조) 하루에 한 번 전화, 문자메시지, 언어로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6조) 가족 구성원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겨주고 축하해준다' '(제7조) ARS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한다' 등 꼭 지켜야 할 가정의 원칙을 사랑(빨강), 화합(주황), 나눔(노랑) 등 7가지 무지개 색으로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원준 씨는 "어머니를 비롯해 각자 자기 일에 바빠 서로 무심했는데, 가정헌법을 만들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가정헌법 제정을 통해 우리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질서 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 통해 가정헌법 제작과정과 내용, 에피소드를 접수해 매달 우수작을 선정하고 액자로 만들어 각 가정에 보내주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서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선진 법체계 확립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기업이 환영하는, 현실 타당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공감' 정책을 소개한다.

서민·취약계층 우선 배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각종 법률과 법령, 행정규칙 등을 헌법정신에 맞게 바로잡아 법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하고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적용'으로 돼 있던 법체계를 '원칙적 적용, 예외적 금지'로 바꿔나감으로써 선진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법령 개폐사업의 추진을 내실화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 개선에 나섰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법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처분기준 투명화 방안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 기업, 민간단체 등이 접수시킨 불편법령에 관한 의견은 약 2천5백여 건에 달한다. 법제처는 이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개폐대상으로 삼아 정비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백14건에 이어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54건을 개폐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팀 이상희 과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선정된 개폐과제 중 미정비 과제에 대한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원천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행정규칙 일몰제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던 불합리한 벌점부과 폐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와 통합 실시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이 있다.

불편법령에 대한 개선 제안이 있으신 분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전화 02-2100-2763 **팩스** 02-2100-2798

서민·취약계층 우선 배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과제	개선 추진 방안	담당 부처 및 문의
전화를 이용한 민원처리 확대	2009년 현재 13종으로 확대 운영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2)2100-3466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의무자 개선	향후 개정 추진(한시적 규제 유예)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8371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 완화	2009년 하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입양기관을 알선받지 않은 아동의 입양에 대한 지원 확대	2009년 하반기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02)2023-8782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제한	2010년 상반기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4
식품진흥기금 활용 가능 사업 확대	2010년 상반기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명확화	2010년 상반기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96
산지전용신고대상(특용작물) 명확화	2009년 하반기 개정 추진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9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효기간 연장	개정 완료 (2009년 7월 1일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연접 개발 산정기준 마련	2009년 상반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3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 수의계약 기간 연장	2009년 하반기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02)2150-5221
외국인투자기업 재투자 범위 확대	2010년 하반기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9



일러스트 · 남동윤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온라인사이트(oneclick.moleg.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령 이용자의 유형을 국민 실생활과 생업 중심으로 분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놓아 한 번에 모든 관련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3일 현재까지 서비스 중인 분야는 84개에 이른다. 지난 2월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이혼, 재혼, 유언, 우수식품인증, 다문화가족, 화물자동차 운전 등 일반 국민의 생업활동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강화됐으며 7월 3일부터는 서민경제 분야가 더욱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는 개인 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자,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총 9개 분야다.

사이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금전거래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상세히 제공하는 한편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성희롱 피해자, 실업급여 대상자, 태아 및 신생아, 재외동포 등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인허가 요건, 정부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재결례 등의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안병준 사무관은 "이 사업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안정된 법률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확대 개편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인터넷 주소창에 'oneclick.moleg.go.kr'을 직접 입력
-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생활법령정보'로 검색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로 들어가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 처벌해야 한다" "살인사건의 15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 "폐쇄회로TV(CCTV)를 더 설치하고 외진 곳 관리를 강화하자" "한 학기에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 상황극이나 사용자 손수제작물(UCC)을 활용하자"….

어른들이 쏟아낸 의견이 아니다. 어린이법제관들이 지난해 내놓은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예방 방안이다.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불편함을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1기 어린이법제관 3백56명에 이어 올해 제2기 5백명을 선정했다.

지난 4월 6일 위촉식을 마친 어린이법제관들은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함께 청와대 견학 행사를 가졌다. 또한 6월 18일에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2009 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열었다.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의 눈으로 본 녹색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주제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들이 자체 홈페이지(moleg.go.kr/child) 의견등록 코너에 환경 관련 의견을 많이 올려 선정됐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서울 가주초등학교 4학년 정혜인 양은 "환경마크가 새겨진 과자나 우유를 사라고 배웠지만 정작 환경

어린이 눈으로 바라본 법과 세상
"불법 벌목하면 2배 심도록"

지난해부터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법의식을 길러주고자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들의 다양한 제안은 법제처 법제관실로 보내져 법령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제처 법제관과 함께 녹색성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마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었는지 아는 어린이가 없다"며 "상점 입구에 마크를 붙여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른 어린이법제관들도 "환경마크 제품을 따로 모아놓은 코너를 만들어 주세요" "신문이나 TV를 통해 환경마크의 의미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제처 법제관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수준 높은 의견도 나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5학년 이용전 군은 "석탄연료가 고갈돼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태양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묘곡초등학교 6학년 고병우 군은 "불법 벌목꾼에게는 잘라낸 것보다 2배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게 하는 벌을 줘서 환경을 되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정부지원금을 주거나 길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길거리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학생도 있었다.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서 구체적 의견 제시도

이 밖에 플러그 뽑기나 물 아끼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일기 쓰기,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 이용하기 등 생활 속 실천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진관초등학교 6학년 이선하 양은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특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개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후변화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토론이 끝난 후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린이들의 특권이니 잘 키워나가야 한다"며 "어린이법제관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국정에 참여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법제관은 앞으로 온라인 의견코너에 생활 속의 불편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제안하고, 법제처가 주관하는 토론마당, 투어링, 수기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들의 활약상을 자세히 볼 수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서울 진관초등학교 이선하 어린이법제관은 "토론회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녹색성장의 실현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린이법제관 둔 서울 목동초교 김연주 교사

"준법정신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서울 목동초등학교에는 어린이법제관이 있다. 교단에 선 지 올해로 16년째인 이 학교 6학년 11반 김연주 교사에게서 어린이법제관의 활약상과 요즘 아이들의 법의식 수준을 알아봤다.


정경택 기자

서울 목동초등학교 김연주 교사는 "어린이법제관의 활약으로 아이들이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어린이법제관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법제관은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장래에 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습 및 생활태도도 모범적입니다.

교내에서 어린이법제관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학교와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학급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에 건의하고, 다른 학우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잘 따르도록 합니다.

어린이법제관에 의해 다른 학생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학급회의 때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이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법의식 수준은 양호합니까.

아이를 하나나 둘 정도만 키우는 가정이 많다 보니 무엇이든 아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 법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이뤄졌던 교육까지 학교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 데다 인성보다는 시험이나 성적을 중시하는 풍조 때문에 아이들의 준법정신과 실천의지가 아주 희박합니다.

아이들이 법의식을 갖기 위해 가장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준법의 바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정한 소소한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 정부는 준법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가정교육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요즘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그 일이 규칙을 어기는 일인지 잘 몰랐다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법의식이 바르게 자라나게 하려면 무엇보다 준법에 관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솔로몬 로파크에서 배우는 法

"법은 벌(Bee)이다 안 지키면 쏜다 꿀처럼 유익하다"

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솔로몬 로파크를 한번 둘러보자. 다양한 체험을 통해 법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법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람이 태어나면 법에 의해 출생신고를 해야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죽어서도 법에 의해 사망신고를 해야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솔로몬 로파크 '청소년 법치세상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가한 전남 구례북중학교 2학년 김승열 학생은 법은 인간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정의했다.

윤승호 학생은 인체의 70퍼센트가 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을 '수분'이라고 정의했다. 윤신영 학생은 법을 '벌(Bee)'로 규정했다. 잘못 건드리면 벌이 침을 쏘듯,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윤신영 학생의 설명을 듣고 있던 강사는 "벌이 꿀을 만들듯 법도 우리를 보호하고 유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며 '법은 벌'이라는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의미를 보충 설명했다. 법을 '밥'으로 정의한 학생도 있었다. 밥 없이 살아갈 수 없듯, 법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란다.

7월 6일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에 자리한 솔로몬 로파크 법치세상 아카데미에 참가한 구례북중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법의 개념을 찰흙으로 그 모양을 빚어 구체적으로 형상화해보기도 했다.

2박 3일 동안 강의·퀴즈·재판과정까지 체험

전체 2박3일 일정 가운데 첫째 날은 이처럼 '법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우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법에



솔로몬 로파크의 법치세상 아카데미는 참여 학생들 스스로 '법'이란 무엇이며, '법치'가 왜 공동체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대해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한 뒤에는 전문강사에게서 '인권 수호천사'로서의 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다음에는 무인도에 표류한 상황을 가정해 '자치 헌법'을 만들어보는 시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칙과 약속이 필요한지 스스로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에는 검찰청과 법원 등 사법기관을 직접 방문해 각 기관들이 하는 일을 현직 검사와 판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조를 나눠 선거운동도 하고 투표를 통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을 뽑아라'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법과 관련된 상식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낸 '법짱을 찾아라'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

솔로몬 로파크는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법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여 학생들 스스로 법이란 무엇이며 법치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날에는 법체험관을 견학한 뒤 청소년 모의재판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강의와 퀴즈, 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3학년 김효선 학생은 "무척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평소 '법'에 대해 의식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법치세상 아카데미는 이처럼 참여 학생들 스스로 '법'이란 무엇이며, '법치'가 왜 공동체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솔로몬 로파크를 책임지고 있는 안병경 한국법문화진흥센터장은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법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전과 질서, 규칙과 약속의 중요성을 참여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법치시민 교육은 곧 민주시민 교육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교재를 매개로 한 강의 위주의 딱딱한 이론교육이 아니어서 그랬을까. 참여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해마다 연말 즈음에 이듬해 참가학교 모집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10 대 1이 넘을 정도로 법치세상 아카데미의 인기는 높다고 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로파크가 대전에만 있을 뿐이어서 한 해 동안 참가할 수 있는 학교와 학생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안 센터장은 "선진국들이 하루아침에 현재와 같은 높은 법의식과 법문화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꾸준히 법치시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문의 · 솔로몬 로파크 042-863-3165,6 www.lawedupark.go.kr





1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 법체험관 '법짱마을'을 찾은 유치원생들.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 요람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의 요람'을 꿈꾸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지난 3월 법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관은 크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법짱마을' 코스와 초중고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치세상' 코스로 나뉘어 있다.

법짱마을 코스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린이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법짱극장'을 시작으로 유괴와 성추행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하는 '안전법짱', 그리고 퍼즐을 통해 국회와 정의의 여신 등을 만들어보는 '세움법짱',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체험하는 '수호법짱', 질서의 편리함과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교통법짱'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치세상 코스는 법체험관 2층에 자리한 영상관 저스티스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법교육 강의 등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동서양 법제도의 발달 과정이 소개된 '세계의 법 역사관'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법치세상-어린이 법짱마을-전통형벌체험장을 돌도록 코스가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 법치세상'에는 법을 만드는 입법체험실을 비롯해 영상녹화 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수사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체험하는 모의법정, 체험교도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코스를 한 번 도는 데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개인 체험은 별도 예약 없이 수시 관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불법 퇴치 “우리 모두 파수꾼”

인터넷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녀사냥,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사이버테러 등 역기능이 두드러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법질서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아DB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누리꾼(네티즌)들의 ‘악플(악의성 댓글)’에 절망한 소설가 이외수 씨가 악플러 전원을 고소했다. 누리꾼들과 광우병, 뉴라이트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이 씨가 도를 넘어선 몇몇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씨는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같이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흔히 접하는 악플은 이제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된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해위가 사이버테러형 범죄라면, 이외수 씨 사건 같은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 복제, 개인정보 침해 등은 일반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연예인의 미니홈피에 악플을 남겼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걸릴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훼손이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이버 범죄와 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법질서가 통하는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그 방향은 크게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자는 자정운동과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 및 법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깨끗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Let’s clean up 캠페인 · e-법사랑 서포터즈 활동

지난 2월 법무부는 국내 7개 포털사이트(다음, 야후, 네이트, 네이버,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와 함께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하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들의 경우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음원, 영화, 사진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거나 유통시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실례로 지난해 접수된 총 9만여 건 중 2만3천건 이상이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부 로펌에서 청소년들을 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자 법무부와 7개 포털 사이트는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갖고 올해를 ‘사이버 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책 공조를 위한 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총 53개 단체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사이버 세상을 비롯해 생활 속 법질서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동아DB



서울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정보통신윤리수업' 시간에 인터넷 퀴즈를 풀고 있다.

를 발굴해 취재하는 민간기자단인 'e-법사랑 서포터즈'도 지난해 발족했다. 올해는 전국 10~30대 5백83명이 e-법사랑 서포터즈로 활약 중이다. 이 밖에도 악플을 배제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선플 달기 운동' 등도 진행됐다.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실시

법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홍보책자 배포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06년 7만5천여 건에서 지난해 12만2천2백 건으로 무려 78퍼센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메신저피싱(메신저로 친구나 지인을 가장해 소액을 빌려 '대포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사기행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로 빚어지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학교에서 '법교육 강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교육 시범학교 및 방과후 법교육 강좌 등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무료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 범죄>,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마는 보디가드> 등은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서부터 각종 대처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손수제작물(UCC) 공모전도 시행 중이다. '우리들이 만드는 Law ♡ Story' UCC · 사진 · 포스터 공모전에는 총 9백7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7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이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저소득층 및 서민 대상 컴퓨터 교육 등)을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G

글 · 정지연 기자

사이버 범죄 신고 등 관련 사이트 안내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	www.lawedu.go.kr
대검찰청 전자민원창구	i-minwon.spo.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www.ncsc.go.kr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www.kado.or.kr/IAPC
유해정보 무료차단 스팸체커	spam.kiscom.or.kr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www.safenet.ne.kr
청소년인터넷안전망	www.greeninet.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

금융채무도 해결,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

어려울수록 '法대로' 하세요

경기가 어려우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법을 지키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불경기일수록 잘 알고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많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불경기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자.

#1 경기 성남시에 사는 강정기(가명 · 45) 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사채를 빌려 쓰게 됐다. 강 씨가 빌린 조건은 7백만원에 연이율 49퍼센트. 사채업자는 2백1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강 씨에게 4백90만원만 줬다. 그러면서도 7백만원 전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해서 갚을 것을 요구했다. 채무는 빠르게 늘어나 결국 강 씨는 불과 넉 달 만에 사채업자에게 실제로 받은 4백90만원의 두 배가 넘는 1천82만원을 갚아야 했다.

막막해진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채업자를 상대로 5백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업법상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 씨는 실제로 빌린 4백90만원에 대한 원리금인 5백50만원만 갚으면 된다. 한편 검찰은 사채업자를 대부업법위반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사채업자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2 서울 노원구에 사는 공성준(가명 · 49) 씨는 사업 실패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나 하는 일마다 잘되지 않는 데다 오토바이 사고마저 당했다. 그동안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카드빚이 6천2백만원에 달했다. 공 씨는 지난해 건설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해 도저히 카드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였다.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법률구조공단을 알게 된 공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은 올해 2월 공 씨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고, 공 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절망 속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 씨는 "이제는 가족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 것"이라며 오랜만에 "아내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법률구조공단에 고마워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되찾아주는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법률구조공단이다. 무료 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한다.

법률상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이용하면 되고,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도 법률비용 부담 없이 신용을 회복해 경제적으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공개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파산 강연은 매일 1회, 개인회생 강연은 매주 수요일에 1회 열린다.

■ 돈 벌면서 빚 갚을 거라면 개인회생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간 후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과 부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보자.

■ 신용불량이라면 채무조정으로 희망을!

대부업체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무이자로 원금만 최대 8년까지 나눠서 갚으면 신용불량을 면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아예 채무상환을 유예받는다.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최대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소외자종합지원콜센터 1577-9449



■ 고금리로 괴롭다면 '전환대출'로!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1천만원이 안 되는 돈을 연 30퍼센트가 넘는 고금리로 쓰고 있다면 전환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3개월 넘게 제때 갚았다면 은행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연 20퍼센트 내외의 금리로 최장 3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전환대출같이 일반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새희망네트워크' (www.hopenet.or.kr)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 1588-1288

■ 과도한 금융부채, 클리닉을 찾자!

포도재무설계는 과도한 금융부채로 고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부채 관련 컨설팅을 해준다. 또 홈페이지(www.podofp.com)에서 1인당 1회에 한해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문의 · 포도재무설계 02-2088-8802

■ 대부업체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라면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다른 부당행위까지 행할 우려가 크다. 반드시 등록번호가 있는 곳만 이용하도록 한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 포함)와의 금융거래로 피해를 봤다면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 대부업피해신고센터 02-3487-5800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빨리 내면 20퍼센트 할인!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퍼센트 깎아준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로 감해진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 빚 많아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SOS!

3천만원 이상의 빚을 연체하고 총채무가 5억원이 안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은 완전히 회복된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교통법규교육으로 벌점 줄인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도 많다. 만약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려고 한다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통법규교육을 받는다. 면허가 이미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임금이 체불됐을 때의 대처법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건 조사에서 사업주 고소까지 노동사건에서 경찰의 역할을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꼭 챙긴다.

사업주가 죄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했어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이용해보자. 친절한 상담은 물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상담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문의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02-3418-9988 G

글 · 이혜련 기자

“제한속도 왜 지키냐고? 그게 법이니까”



요즘 사회는 민주와 법치의 이념에 관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무려 3개월간 지속된 촛불시위와 올 들어 발생한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과 갈등 양상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여줬다.

우리 사회는 올해로 민주화 22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이 된 나이이다. 민주가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 민주 시민의 행동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은 사회적, 정치적 논란의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야 할 때다. 그런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80퍼센트 이상의 대학 입학률을 자랑한다. 이런 마당에 어른들이 민주 시민의 기본 소양에 관해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나의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

지난해 태국 왕실이 한국의 법질서를 비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태국은 당시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다. 그런 나라 왕실이 우리나라의 ‘태국여행 자제’ 권고에 대해 촛불시위를 걸어 “데모를 해도 한국이 훨씬 크고 폭력적이지 않으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나 세종로 사거리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인다. 카메라 셔터도 열심히 눌러댄다. 이러다 촛불시위가 한국의 관광상품으로 등장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지난해와 올해 촛불시위는 법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제기한 사건이다. 야간 정치집회, 도로 점거, 폭력 행사, 공공기물 파손 등이 분명한 위법인 데도 시위대는 국민 건강권을 내세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폭력시위를 1987년 6월항쟁과 동렬(同列)에 놓고 국민의 저항권 논리를 동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진압경찰에 대한 온갖 린치는 폭동 수준이었다. 시위대의 불법적 폭력과 경찰의 합법적 물리력 행사를 같은 ‘폭력’으로 혼동하는 것이 일부 세력의 법의식 수준이다.

동서고금의 어느 사회나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규율이 존재했다. 4천3백여 년 전 고조선



거리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불법 주차, 무단 도로점용 등 무질서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깃들어 있다.

시대의 8조 금법(禁法), 3천7백여 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그런 것이었다. 우리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전반부는 국민의 기본권, 후반부는 권력구조에 관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권이 존재한다는 논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는 항상 남의 그것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에 의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 조항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도 남의 도로교통권, 영업권, 생활권을 방해하지 않고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조금 불편해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 법의식 선행돼야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법의 수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및 의식수준에 맞아야 한다. 일반 국민이 보통의 주의만 기울이면 지킬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도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엔 불법과 전과자를 양산할 뿐 실효성이 없다. 둘째, 국민은 법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키는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불법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둘째와 셋째에서 문제가 많다.

미국의 운전면허시험에 '제한속도를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라면 '과속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니까'가 정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법이니까'가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법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집행과 관련해 우리 경찰은 단속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폭력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겠다고 해놓고는 거의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최근 심야학원과 잔반 재사용 식당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속이 흐지부지되면 법과 공권력의 권위만 떨어진다. 적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부작용도 빚는다.

준법과 자유, 민주와 법치, 법치와 인권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보완 또는 협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1백퍼센트 향유하기는 불가능하다. 너와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과 조화의 지혜를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따라서 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자유와 권리, 민주와 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G

글 · 육정수(동아일보 논설위원) / 사진 · 정경택 기자

법질서 확립, 선진국에서 배운다

집회자유 YES! 폭력시위 NO!

영국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네덜란드는 타협과 합의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성공한 반면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는 불법 폭력시위로 한동안 홍역을 치렀다.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지난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열린 프랑스 동부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얼굴을 가린 과격 시위대가 차량 파손, 주유소 습격 등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독일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는 대신 복면 착용을 금지해왔다. 독일에서는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집회법에 따라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마스크 등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아DB

프랑스에서는 복면시위에 벌금을 부과한다.

복면시위 금지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예외가 아니다. 오스트리아 집회법은 행정청이 복면 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시위로 변질돼 법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1981년 영국 런던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마거릿 대처 총리 역시 단호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바로잡았다. 대처 총리는 나쁜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프로그램을 관철시켰다. 국민에게 분명한 개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한편 반대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갔다. 이를 통해 영국은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뛰었고 유럽 제2의 경제부국으로 거듭났다. 확고한 법치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시장원리를 도입한 대처 총리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국가 위기극복과 장기번영의 초석을 마련했다.

위기에 처한 법질서를 국민과의 대타협으로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던 네덜란드는 1970년대 말부터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방만한 사회복지제도 운영, 재정적자 확대, 높은 조세부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최악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을 경험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82년 네덜란드 노사정 대표 3인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와 사회보장세의 노동자 부담 증가를 수용하고,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회 재분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수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협약은 네덜란드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계승하고, 경제안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과격시위 될라' 선진국도 복면금지

반면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질서뿐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 20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부국이었지만 소득 불평등이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했다. 그 무렵 후안 페론이 사회정의를 내걸고 재분배정책을 추진하면서 빈부갈등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1913년 2천3백77달러에 달하던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9년에도 3천8백80달러에 머물렀다.

이탈리아도 2000년대 좌우 이념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한동안 내홍을 겪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사회협약 없이 추진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문제였다. 시장경제 룰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 정책은 많은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폭력시위를 양산했다. 결국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탈리아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0.9퍼센트에 그쳤다. G

글 · 김지영 기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Korea.kr
www.korea.kr

KTV
www.ktv.go.kr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열 돌 맞은 하나원 최초 여성 원장 윤미량

"탈북자 지원 통합망 구축할 것"

우리나라로 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을 하고 있는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이 7월 8일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윤미량 하나원장은 하나원을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Governance)의 홈센터로 키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연합

윤미량 하나원장은 남북한 여성 지위 비교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1만6천명을 넘어섰고, 2년 내에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 지원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원'이 1999년에 개원했다. 7월 8일은 하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었다.

하나원은 지금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지난 6월 취임한 윤미량(50) 원장이 있다. 윤 원장은 남북관계 전문가로, 통일부 사상 첫 여성 고위 공무원(실국장급)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하나원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관학 통합연계망'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간 뒤 재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운영 구상을 밝혔다.

하나원 최초의 여성 원장이어서 기대가 남다릅니다. 어떤 일에 중점을 둘 생각인가요.

하나원이 열 살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새로운 10년을 위해 하나원을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Governance)의 홈센터(민관학 통합연계망)'로 키워나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합니다. 아직도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북송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사롭게 강을 건너서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한결 나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통제가 얼마나 강화되느냐 여부에 달린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건가요.

제3국이나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사람이 많아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심리안정, 자기긍정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심리치료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치유 개념보다는 자기긍정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이 어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탈북자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3개월이 짧다고 하는데 본인의 희망,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간, 주택공급이라든가 취적(就籍) 등 우리 국민으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행정소요 시간을 종합해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취업한 탈북자의 평균 소득이 월 93만7천원으로 남한 근로자 평균의 3분의 1가량이며, 대부분이 제조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동아DB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하나원엔 유아놀이시설도 갖춰져 있다(아래 왼쪽).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외래어가 많아서 사회에 나간 북한이탈주민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일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사고 칠 경우에만 부각돼 국민들이 편견을 갖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잘사는 모습을 언론이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외적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이런 점이 영향을 끼치나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이력서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남북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인식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도 가난하면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데다 말씨까지 다른 것이 차별의 한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문제를 논의하려고 전문가 1백명을 모아놓으면 1백 가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백인백색이라 접점을 찾아 모두에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착금을 주라고 하고 누구는 주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북한이탈주민만 신경 쓰지 말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어찌 사는지를 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회적 합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고 남한 학생들과 학력 격차도 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갖고 있나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원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인 하나둘학교를 강화해 디딤돌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북에서 온 청소년들은 제3국에 있는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선 간신히 따라가도 중고등학교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수학 표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근현대사 부분도 김일성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G

글 · 김승욱(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서울생활 2년 만에 자산관리사 된 탈북자 김 씨

"사기 당한 후 이 악물고 공부했다"

2007년 2월 서울 땅을 밟은 탈북자 김 모(37) 씨는 다수 탈북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식당이나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는 것과 달리 서울생활 2년여 만에 고객 80명을 관리하는 금융자산관리사(FP · Financial Plan-ner)로 일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본인 말대로 '체제와 생활방식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말이다.

그는 겉모습은 온순해 보였지만 말할 때 눈빛은 진지했고 단어 하나하나도 허투루 선택하는 법이 없었다. 조리 있는 말솜씨는 타고난 것 같다. 과연 인민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최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다웠다.

"아는 분이 '돈 벌게 해주겠다'기에 따라간 곳이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열심히 교육받고 2백50만원 떼이고 나서야 '사기'라는 걸 알았죠(웃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경험과 최선을 다해 받은 교육 덕에 한국사회의 진짜 모습을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왕 할 것 꼭 성공하자 다짐하고 영업직으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 훈련을 받은 뒤 임대아파트(주거지원금 1천3백만원 상당)와 정착지원금 6백만원을 받는다. 3백만원은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농협 통장으로, 나머지 3백만원은 3개월로 분할해 지급된다.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다 날린 셈이니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험사에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셈이다.

"사기사건 이후 송파에 있는 식품가공 회사에 다녔어요. 월 1백20만원 정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먹고살려고 탈북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이왕 할 거 성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에 뛰어들기로 했고요."

이후 김 씨는 재무, 회계, 경제, 경영, 투자이론 등 관련 서적을 손에 잡히는 대로 탐독했다. 컴퓨터학원을 다니면서 정보처리기술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도 땄다. 처음엔 복잡한 금융용어 익히기에도 벅찼다. 그래도 1999년부터 8년간의 중국 망명생활 시절 틈틈이 한국 방송으로 봐둔 코스피니 주식이니 하는 개념들이 도움이 됐다.

탈북민 대부분이 투자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김 씨의 꿈은 워런 버핏 같은 자산운용 전문가가 되는 것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이다.

> **하나원에서 받는 영어나 외래어, 한자, 역사, 정치 교육도 물론 필요하다. 이론교육보다 직업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게 남한사회 정착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는 게 김 씨는 안타깝다. 전문직 종사자 탈북자 모임인 'NK지식인연대'에서 금융 관련 강의 요청이 왔을 때 흔쾌히 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씨는 하나원 이후의 교육 부재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나원에서 받는 영어나 외래어, 한자, 역사, 정치 교육도 물론 필요하다"면서도 "이론교육보다 직업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게 남한사회 정착에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꿈은 두 가지다. 먼저 실력을 인정받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롤모델로 '워런 버핏'을 거명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 있는 아내와 네 살배기 딸, 부모님과 형제들을 데려오는 것이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4대강 살리기
제14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목욕하러 잠깐 내려왔다가 날개옷을 잃어버려 산골 나무꾼에게 시집온 지 어언 3년.
꺄악!
날렵하던 몸매는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새 애 둘 딸린 아줌마가 됐다.
엄마, 밥, 밥, 밥, 밥, 밥!
애 하나 더 생기기 전에 날개옷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시끄러워! 때 되면 어련히 안 줄까봐.
하지만 사는 곳이 너무 깊은 산골이라 어디 나가서 찾아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
여보야~ 선물 사왔다~
아주 먼데 있는 읍내 여성복
사오라는 날개옷은 안 사오고….
이대로 단념할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때 와이브로, 와이파이 메시를 강 따라 연결해 이젠 이 산간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된다지?
얍!
오오옷!!!
Z market
날개옷
검색
'날개옷'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35개 카테고리
정장스타일 날개옷 (847개)
섹시S라인 날개옷 (35개)
옥황상제 보필용 날개옷(15개)
스포츠/댄스 날개옷 (18개)
상품명
[무료배송 5000원 할인] 여름신상/날개옷/명품스타일
[타임특가]
여보! 가지 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동네 목욕물도 좋아졌는데 가긴 어딜 가? 돌아 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한 달

4대강 살리기, 너를 보여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 아니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등의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위한 최선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운하에 필요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 계획이 없고 화물선 운항을 위한 갑문이나 터미널, 교량 등의 설치 계획도 없습니다. 16개의 보(洑)가 설치될 예정인데, 보가 많을수록 갑문 설치에 드는 시간이나 통행시간이 장기화돼 화물선 운항에 불리합니다.

2 '친환경 보' 설치로 수량을 풍부하게 합니다

물 저장량을 키우기 위한 친환경 보를 설치하면 '물그릇'을 키울 수 있어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좋아집니다. 또한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닌 수문을 갖춘 가동식 보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악화 요인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유역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하천의 유지유량을 증대시켜 수질 개선을 꾀할 예정입니다.

3 종합방제센터로 수질오염 예방·관리에 힘씁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한강의 경우 어류와 조류의 생물 종이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친수 공간 제공 및 홍수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강은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해 물을 풍부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 생태계가 회복되어 연어, 은어가 회귀하고 백로 서식지가 됐습니다. 4대강 준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해 하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4 본류 우선 정비해 지류 피해까지 막습니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이유는 대도시에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본류를 정비해 홍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 수위도 낮아져 본류뿐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본류 구간과 주요 지천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5 계획수립에서 협의까지 철저히 환경성을 검토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도 그 내용은 충실하고 철저히 해 성공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스터플랜 착수 이전부터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했고, 수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역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동아DB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유역에 빈번했던 홍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경택 기자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을 건강하게 만들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친환경 프로젝트다.

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운영 중입니다. 계획 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 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시발굴·수중 조사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섭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천 둔치부와 제방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가능한 지점 4백7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발굴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수중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물막이공사 등으로 보호, 발굴할 계획입니다.

7 하천구역 경작지 보상 정리해 재해를 줄입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농약, 비료 사용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 정리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보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되 경작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 3년 홍수 피해액 투자로 수십 년을 보호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지난해 발표 이후 13조9천억원에서 8조3천억원 증가한 22조2천억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비와 총인(인화합물의 합계) 처리 비용을 위한 본사업이 3조원 증액됐고, 섬진강과 주요 지천 정비, 환경부 수질 개선사업 등 직접연계사업이 신설되면서 5조3천억원의 예산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천억원이나 복구비 4조3천억원, 예방투자비 5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가뭄 및 정신적 피해 예방, 레저 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을 생각하면 사업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9 5년 홍수 피해 복구비 투자로 수십년을 보호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원, 복구비는 4조3천억원으로 총 7조원이 사용됐습니다. 일부에서 이에 대해 4대강이 아닌 전국 하천 피해액이라며 과장됐다고 하는데, 4대강 유역 면적이 전 국토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므로 전국 통계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에 강풍에 의한 피해가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태풍 발생 시 호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10 하천 기능 살리고 서민 계층 돕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가 자원인 하천의 제 기능을 살리면서 동시에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1차적 피해자가 농민과 서민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65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G

정리 · 김민지 기자



정광수 산림청장은 "숲을 가꾸는 것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일자리 6만6천개 만든 정광수 산림청장

"숲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뿌리"

산림청은 숲 가꾸기 등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6만6천4백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7월 6일 정광수(56) 산림청장을 정부대전청사에서 만났다. 청장실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녹색일자리 고용 및 예산 조기집행 상황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역별, 사업별로 일자리 고용 현황과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빼곡히 기록된 현황판은 그간 산림청의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

숲 가꾸기 등 산림청이 추진한 여러 사업으로 많은 녹색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 분야에서 6만6천4백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숲 가꾸기와 조림, 산림 복원 등 산림 자원화를 통해 3만2천9백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등산로 숲길 정비와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녹색생활공간 확충을 통해 1만83명,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1만8천4백명,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사업에 4천5백46명, 인턴 및 연구개발(R&D) 사업에서 5백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산림청이 만들어낸 일자리는 대부분 숲에서 일하게 돼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숲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은 숲 가꾸기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일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통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된다며 세 가지 점에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림청의 녹색일자리 사업도 국가적 관점에서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숲 가꾸기 등으로 국토환경이 개선되고, 둘째는 녹색일자리 제공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셋째는 등산로 개설 등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산림 부산물을 가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톱밥 등 산림 부산물을 압축해 덩어리로 만든 '펠릿'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펠릿의 열효율은 경유와 같으면서도 연기가 없고 재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값도 경유의 절반 수준입니다.

펠릿을 청정연료라고 하는 이유가 펠릿 1톤을 때면 이산화탄소 1.37톤의 감축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펠릿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원유 수입을 감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또 하나의 유전(油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숲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청정 유전인 셈이지요. 농가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펠릿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면 연료비 절약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펠릿이 일반화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겠군요.

저탄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것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산림입니다. 일본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6퍼센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3.7퍼센트는 산림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숲을 가꾸는 것은 곧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림청의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더군요.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가 숲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탄생목'을 기념식수해 주면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배출하게 될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아기에는 숲 유치원 등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고, 청장년기에는 휴양림과 등산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숲의 자연치유 기능이 알려지면서 건강을 되찾는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 차원에서도 숲의 자연치유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림테라피(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개장해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6월 초 제주에서 열린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국가브랜드를 세 가지 꼽는다면 새마을운동과 정보기술(IT), 치산녹화입니다. 특히 치산녹화사업은 독일이 3백 년 걸려 이룬 것을 우리는 4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리의 치산녹화 노하우를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출범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신화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G

글 · 구자홍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인도네시아 전통가옥에서 쉬어갈까~

지난 6월 청태산휴양림에 준공… 한·아세안 우호협력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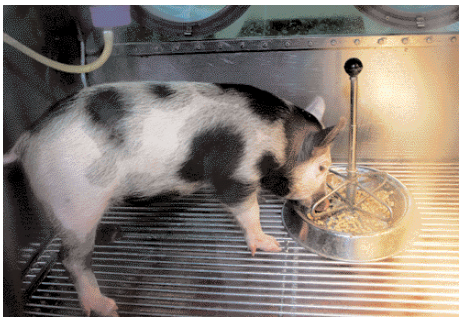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창이던 지난 6월 4일, 산림청은 한 · 인도네시아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강원도 횡성 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준공식을 가졌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수행원으로 방한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을 비롯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등 준공식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산림청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전통가옥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개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2만명입니다. 전통가옥은 그분들이 고향에 온 듯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는 휴양시설이 될 것입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앞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세안 국가의 전통가옥을 더 많이 지어 한국에 있는 아세안 출신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태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가옥.



복제 미니돼지 지노는 특정병원균이 차단된 인큐베이터에서 멸균처리된 사료만 먹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종(異種)장기이식 개척 국립축산과학원

그곳에 가면 특별한 돼지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는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 두 마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면역거부반응 유전자가 억제된 미니돼지의 탄생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이종(異種)장기이식 연구에서 국제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돼지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났다.

경기 수원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돼지가 있다. 몸값은 약 34억원, 10여 명의 박사가 시중을 든다. 주인공은 지난 4월 3일 태어난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인 지노(Xeno)다.

'돼지 왕자'라는 별명을 지닌 지노는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없다. 지노가 있는 곳은 외부 공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압(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장치가 된 특정병원균제어(SPF)센터. 그 속에 또다시 양압 장치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지노가 있다. 가격이 2천5백만원에 달하는 인큐베이터는 병원균을 차단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기가 이중으로 걸러진다. 바닥에는 고압멸균한 수술포와 수건을 깔아주고, 방사선동위원소로 멸균처리한 사료를 먹인다.

지노를 만나기 위해 소독실을 거쳐 모자가 달린 멸균 소독복을 입고 마스크와 수술 장갑, 덧신을 착용했다. 인큐베이터 속의 지노는 인큐베이터 펜스를 넘으려고 애쓰면서 돌보는 실무관의 처치용 장갑을 깨물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였다. 태어났을 때 4백60그램이었던 지노의 지금 몸무게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5킬로그램 저울의 한계를 한참 넘었다. 7월 말쯤 특정병원균 차단 돈사가 완성되는 대로 돈사로 옮겨질 예정이다.

다 자라도 몸무게가 80킬로그램 정도인 미니돼지는 사람과 장기 크기가 비슷하고, 한 번에 5~6 마리씩 1년에 두 번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면역거부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였다.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이란 미니돼지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돼지에게는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알파갈이라는 항원을 공격해 몇 분 내지 몇 시간 안에 이식된 장기를 죽게 만드는 반응이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F미니돼지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뒤 유전자 조작으로 알파갈 전이효소(α1,3-Galactose) 유전자 두 개 중 하나를 제거했다. 이를 핵을 제거한 돼지 난자에 주입해 수정란을 만들고, 대리모 돼지에 이식해 탄생시킨 것이 지노다.

세계 두 번째로 면역거부반응 없앤 미니돼지 탄생시켜

"지노가 태어나기까지 6천여 개의 복제 수정란을 40여 마리의 대리모 돼지에게 이식했습니다.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복제 수정란을 만들다 보면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할 만큼 아프고, 하루 6시간씩 서서 이식수술을 하면 땀으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형질전환 복제 수정란은 대리모 돼지에게 이식한 후 임신 50일 전후에 유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멸균소독복을 입고 대리모 돼지 배 밑에 들어가서 매주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박수봉 과장은 지노는 연구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성공 확률이 1퍼센트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난지라 연구진이 지노에게 쏟는 정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노는 그동안 몇 차례나 연구진을 울리고 웃겼다. 매일 두 사람이 24시간 지노를 관찰하고 생후 한 달 동안은 두 시간 간격으로 완전 멸균된 식물성 분유를 먹였다. 그런데 태어난 지

나흘째 되는 밤 11시, 형남웅 실무관이 우유를 먹이기 위해 지노를 깨웠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혼비백산한 형 실무관은 지노의 온몸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놀라고 당황해서 전 연구진을 비상소집하려고 할 때 지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벌떡 일어났다.

"지금은 '지노의 시체놀이'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그땐 정말 초주검 상태였습니다. 단 10분이었지만 지노가 깨어나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 다들 주저앉았으니까요."

우제석 박사는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태어나는 일반 돼지는 어미의 꿀꿀거림과 형제들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서 젖을 찾지만, 똑같은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인큐베이터에서 홀로 키워지는 새끼는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동안 34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내 아이 건강보다 지노의 건강 상태에 더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노는 내년 6월쯤이면 2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노는 알파갈 전이효소 유전자 두 개 중 하나만 제거된 상태. 교배를 통해 2세대 이상 지나면서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제거된 돼지가 나올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25일 지노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 지노 2호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박수봉 과장은 "우리의 장기이식용 미니돼지 생산 시스템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라며 "2017년이면 영장류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류 실험은 2005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바분 원숭이에게 알파갈이 제거된 미니돼지 심장을 이식해 6개월간 생명을 유지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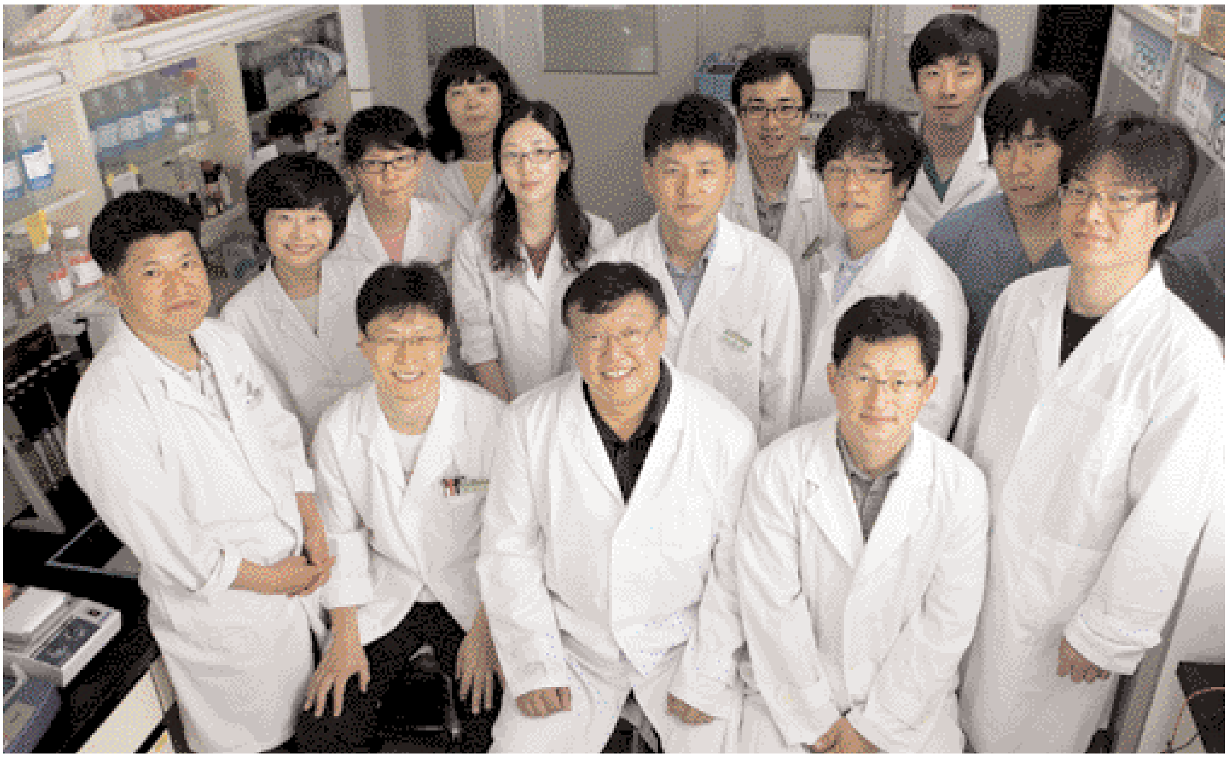
"6개월만 돼도 성공적이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는 시간 연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장기이식 대기자에 희소식… 지속적 지원 있어야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여 명. 지난해 국립의료원 발표에 의하면 장기이식 대기자 중 한 해 평균 8백17명이 사망한다. 인체 장기가 손상되어 치료 또는 회복이 불가능할 때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장기이식 희망자는 많고 기증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밀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과장은 이종장기이식 연구는 인권침해와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의 심장이나 신장, 간 등을 이식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당장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닌 데다 연구비가 많이 드는 분야라 연구진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노와 지노 2호의 탄생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내 이종장기이식 연구의 국제적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 지노와 지노 2호를 탄생시킨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원들. 앞줄 가운데가 박수봉 과장, 그 오른쪽은 '돼지아빠'라고 불리는 우제석 박사.

한우 홍보대사 탤런트 최불암

“유통 단계까지 이력 추적 한우, 이제 믿고 드세요”

사육 단계에서만 시행되던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제 쇠고기를 살 때 진짜 한우일까, 혹시 외국산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동아DB

사육에서 유통까지 한우의 모든 이력 추적이 가능해졌다.

개체 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소에게 달아주고, 도축된 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개체 식별번호를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이트나 휴대전화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최불암입니다. 한우 홍보대사가 된 이후 한우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물론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먹을 때마다 이게 정말 한우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 전엔 타 지역산 쇠고기와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횡성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강원 횡성군의 한 농협이 적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농협마저도 속이니 어떻게 믿고 먹나 싶더군요.

이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 단계에서만 시행되던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6월 22일부터는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소를 기르는 농가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 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소에게 달아주고, 그 식별번호를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www.mtrace.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도축할 수 있으며, 도축된 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축된 고기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도 판매하는 쇠고기 또는 판매표지판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체 식별번호로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육자, 도축 장소, 육질 등급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체 식별번호를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이트나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버튼)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체 식별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것 외에도 소가 도축되어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 같은 지도단속도 실시한다는군요. 더 이상 가짜 횡성한우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쇠고기 이력 추적제 덕분에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은 우리 쇠고기에 한해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말부터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 추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안내 ·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www.mtrace.go.kr
휴대전화 6626+무선 인터넷 버튼



동아DB

코트라 해외지사에서
일할 인턴사원들.
아래는 '일모아' 홈페이지 화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아 모아~

7백26개 일자리 공고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들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부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이진아(25) 씨는 아직 취업이 안 돼 매일같이 취업 관련 사이트와 정부 부처 사이트를 서핑하며 취업 정보를 찾고 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 그로서는 이리저리 사이트를 옮겨 다니는 것도 꽤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을 한곳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과 지원금 지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동일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한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중복수혜 관리기능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간의 중복수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고용정책과 최윤미 사무관은 "앞으로 모든 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백35개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97개 사업, 57만명에 대해 누가 어떤 기관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향후 나머지 38개 사업도 추가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부처별, 지역별, 일자리 분야별, 수요자 유형별로 일자리 모집공고를 검색할 수 있고, 신청 방법도 알아볼 수 있다. 현재 10개 부처(청)에서 7백26건의 모집공고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와 기타, 해외 등을 포함해 18개 분야로 구분돼 있다. 일자리 분야별로는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수요자 유형별로는 청년층, 고령층, 취약계층, 전문인력, 국민일반의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일자리 · 생계 지원 · 실직자 교육 등 통합 정보 제공

일모아 시스템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 능력 개발, 생계 지원, 실업 급여, 창업 지원, 재직자 훈련 등을 포함한 26개 부처 2백30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일모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진아 씨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들을 한자리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편리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그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바로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다. 더불어 '직업전망'을 통해 각광받는 유망 직종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안내 · 일모아(www.ilmoa.go.kr)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도전정신으로 영화와 같은 감동을 주고 있는 한국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선수들.

‘한국판 쿨 러닝’ 무한도전은 계속된다

봅슬레이 대표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 향해 구슬땀

비인기 종목의 뜻하지 않은 국제대회 동메달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한국 봅슬레이가 사상 첫 올림픽 본선무대 진출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내년 2월 열리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해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한여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부서진 플라스틱 욕조를 타고 자메이카의 푸른 풀밭 위를 질주하던 엉뚱한 사나이들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도전담으로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영화 〈쿨 러닝〉. 실화를 소재로 해 더욱 인상적이었던 이 영화가 재연됐다. 바로 ‘한국판 쿨 러닝’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동계스포츠 종목인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1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파크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08 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덜컥 큰일을 냈다. 2인승 경기에서 사상 처음 월드컵 시리즈 및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내더니 다음 날 4인승 경기에서는 1, 2차 시기 합계 1분 39초23으로 캐나다(1분37초22)와 미국(1분38초43)에 이어 3위를 차지, 주최 측은 물론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까지 놀라게 했다.

언론들은 앞다퉈 영화 〈쿨 러닝〉의 한국판이 아니겠느냐며 흥분했다. 어느 방송국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쾌거를 거둔 것에 감격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 속에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은 지난 5월 공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4명의 선수를 새로 발탁했다. 대회 출전 때마다 남의 봅슬레이를 빌려 탔던 아픈 기억을 뒤로한 채 선명하게 ‘KOREA’라는 글자가 새겨진 신형 봅슬레이를 갖게 됐다.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 종목임에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소개되어 큰 반응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한국 봅슬레이의 기적의 중심엔 감독이자 선수로 나섰던 강광배(35·강원도청) 선수가 있다. 원래 알파인 스키 선수였던 그는 대학 시절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으로 스키를 그만둔 뒤 썰매종목에 눈을 떴다. 썰매종목 입문 3년 만인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루지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 스켈리턴 선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스켈리턴으로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연속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봅슬레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3년이다.

루지, 스켈리턴에 이어 봅슬레이로까지 매번 ‘전향’을 선택한 것은 후배 양성과 썰매종목 부흥이란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는 루지나 스켈리턴을 하겠다는 후배가 있으면 미련 없이 대표선수 자리를 물려주었다.

원래 대표팀 전원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국내에 남아 체력훈련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변경됐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과 부족함이 한국 봅슬레이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야망은 있다. 바로 봅슬레이로 올림픽 무대를 밟아보는 것.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위해 그는 올해 감독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선수생활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대신 최근까지 현역으로 뛰었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알렉산드르 스트렐트소프(34)와 안드레이 티카추크(28)를 코치로 영입해 기술적인 면을 보강했다.

그 결과는 곧 나타났다. 지난 4월 아메리카컵 7차 대회 4인승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56초26으로 라이벌 일본을 0.35초 차로 제치고 또다시 동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실패해도 포기 안 해… 우리의 목표는 우승”

“두 시즌 연속 메달권에 진입했다는 건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죠.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림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본선 무대를 밟기 위해선 오는 10월부터 열리는 국제대회 7개의 성적을 합산해 세계 17위 안에 들거나 아시아권에 배정된 한 장의 출전 티켓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일본이 넘어야 하는 산인 셈. 봅슬레이 경력 3년차 이진희(25) 선수는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0.01초 차로 순위가 바뀌고 메달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에겐 한국인 특유의 강한 정신력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는 동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해 전용경기장을 갖추고 있고 실업팀도 30여 개가 넘는 일본을 부러워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썰매가 생겼고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알펜시아 스타트 연습장이 9월이면 완공될 것이라면서.

봅슬레이는 개인경기인 루지나 스켈리턴 등과 달리 단체경기이다 보니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그동안 출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탑승해 썰매를 조정하는 파일럿을 제외한 브레이크맨(제동자)과 푸셔(4인승에서 2, 3번째 탑승하는 선수)의 양성은 시급했고 또 절실했다.

그래서 연맹은 4명의 선수를 지난 5월 선발전을 통해 충원했다. 30미터와 60미터 달리기, 던지기 등 테스트를 통과한 이들은 거의 비슷한 체격조건을 갖고 있다. 원반, 창, 투포환 같은 육상 투척종목 선수들로 건장한 체격에 날렵함까지 갖췄다. 봅슬레이는 빠른 몸놀림으로 짧은 시간 최대 근력을 낼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범수(20·원반던지기 출신)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는 길이 육상보다 빠를 것 같아 지원했다고 털어놓았다.

“선수라면 누구나 국가대표와 올림픽 출전이 꿈이잖아요. 원반던지기를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의 꿈을 봅슬레이가 이뤄줄 것으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표는 출전이 아닌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6월 초 신인 선수들은 기존 선수 6명과 상견례를 가진 다음 6월 말까지 태릉선수촌 합동훈련을 하고 7월 초 강원도 전지훈련을 마쳤다. 이어 7월 10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캐나다 캘거리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다.

원래 대표팀 전원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출국을 앞두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의 예산 부족 때문에 스폰서가 없는 일부 선수들은 국내에 남아 체력훈련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변경됐다.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과 부족함이 한국 봅슬레이의 앞길을 막고 있다.

그래도 강광배 선수는 넉넉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한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진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G

글·홍희정(조이뉴스24 객원기자)



한국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의 다음 목표는 동계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링컨의 위기돌파 전략, 이기는 커뮤니케이션

데이비드 어코드 지음 김정남 · 김욱영 옮김 이상 펴냄 1만1천5백원

협상과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링컨의 편지에서 배운다



정경택 기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덥수룩한 구레나룻, 노예해방, 남북전쟁…. 이 정도 키워드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링컨의 후계자임을 자처해 그를 벤치마킹했고, 26대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어려운 결정 앞에 설 때마다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왜 리더들은 링컨을 역할 모델로 삼고 그의 리더십과 소통 방식을 연구하며 따라하는 걸까. 수많은 사업실패와 좌절, 역경을 딛고서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진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남긴 수백 통의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링컨은 정치적 라이벌, 전쟁터 지휘관, 가족, 친구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라이벌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인상적이다. 1836년, 27세이던 링컨이 일리노이주 주의회 의원 재선에 도전할 때였다. 상대편 후보자였던 로버트 알렌 대령은 유권자들에게 링컨의 치명적인 스캔들을 알고 있다며 떠벌리고 다녔다. 그러자 링컨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편지를 썼다.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사실을 숨긴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령님이 저 한 사람보다 유권자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일을 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같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일이었지만 링컨은 냉철하게 대응했다. 링컨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전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방과의 이견을 현명하게 좁혀갔다.

또한 링컨은 남북전쟁 중 자신과 견해가 다른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약 장군이 다음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제 계획을 포기하고 장군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첫째, 장군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둘째, 장군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은가요? 셋째, 장군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나요? 넷째, 저와 장군의 계획의 가치가 똑같나요? 다섯째, 실패할 경우 제 계획보다 장군의 계획이 철수하기 더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중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2백년 전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꾼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링컨 미 대통령의 협상과 설득 노하우가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그는 권위와 자존심을 내세우는 최고 권력자로서 만족감을 누리지 않았다. 설득과 토론이란 과정을 밟아 최선의 결정을 선택했다.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렇듯 링컨이 쓴 편지 속에서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략 16가지를 끄집어낸다.

'어떤 위기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면 돌파하라' '견해가 다른 적과도 소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움을 무작정 거절하기보다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라' 등 링컨이 전하는 이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한마디로 당당하고 솔직하다. 이런 링컨 대통령이 현재 소통의 부재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본다면 뭐라 말할까.

"어느 곳이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통점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서로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이지요." G

글 · 김민지 기자

배려의 물잔

글과 그림 · 최영순



타인에 대한 배려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신(神)적인 행동입니다.
– 달라이 라마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시회

숭례문 현판, 화마 이기고 돌아오다



정경택 기자

숭례문 현판이 제 모습을 되찾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2월 10일. 밤새 화마에 스러져가는 숭례문을 바라보던 국민의 가슴은 안타까움에 함께 타들어갔다. 소방관들이 불길과 싸웠음에도 안으로 번지는 불길을 잡지 못해 서서히 제 모습을 잃어가다 마침내 숭례문의 위엄찬 누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새벽, 온 국민은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유일한 위안이 불길에서 살아남은 숭례문 현판. 그 숭례문 현판이 제 모습을 찾아 우리 곁에 돌아왔다.

숭례문 화재 당시 화마를 피하긴 했지만 10여 미터 아래 땅으로 떨어져 조각났던 숭례문 현판이 복원돼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길이 3.5미터, 폭 1.5미터에 무게만 1백 50킬로그램에 이르는 숭례문 현판은 당시 추락의 충격으로 38개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숭례문 현판 복원작업을 진행한 문화재청 숭례문복구단(단장 김창준 문화유산국장)은 38개 조각 가운데 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버리고 숭례문 화재로 훼손된 목재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를 버린 조각 대신 채워 넣어 현판 복원의 의미를 담았다.



왼쪽은 복원 전 모습. 지덕사 탁본에 맞춰 일부를 수정(점선 부분)해 복원했다.

숭례문 현판 복원의 핵심은 현판 글씨의 원형을 찾는 일이었다. 숭례문복구단은 양녕대군의 사당인 지덕사에 소장된 숭례문 현판 탁본 자료와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복원 전 현판의 글씨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지덕사 탁본이 원래 글자체임을 밝혀내 지덕사 글씨체로 복원했다.

조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과 부인 광산 김씨의 묘와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는 지덕사의 탁본은 1865~ 187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숭례문 현판 글씨는 누구의 작품인지 확실치 않다. 글을 쓴 사람이 양녕대군인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신장, 정난종, 유진동 등 여러 설이 분분하다.

숭례문 현판 복원작업에는 중요무형문화재 각자장(나무에 글 새기는 사람) 오옥진 씨, 단청장(단청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 홍창원 씨 등이 참여했다. 숭례문은 2012년까지 제 모습으로 복구될 예정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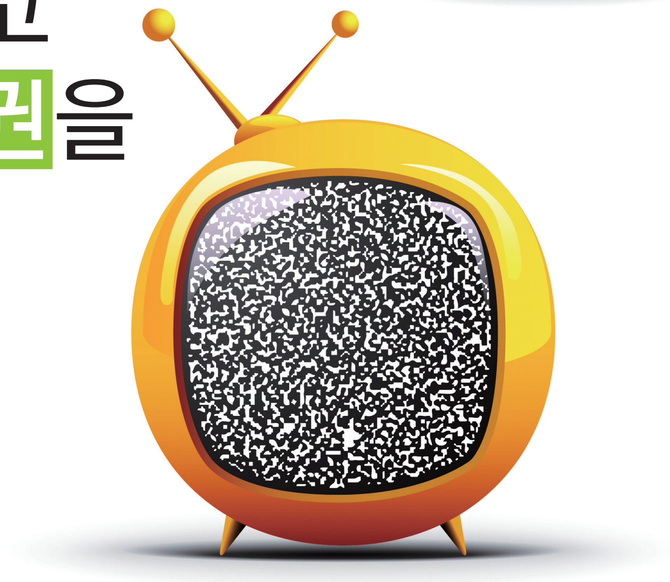
문의 · 국립고궁박물관(02-3701-7500)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법,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신문·방송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 산업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칸막이 규제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자 유입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경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세금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 한해 3,000억원 이상이 쓰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진입장벽을 허물어 신규투자를 늘리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현재 방송은 지상파 TV 3사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왜곡제작 프로그램과 불륜 드라마가 넘쳐나도 국민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 수를 늘려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국민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OECD 국가 중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대기업과 신문사 지분은 20%로 제한되어 지상파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MBC와 KBS-2TV 민영화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OECD 30개국 중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방송채널수가 늘어나면 정부 장악은 불가능해집니다.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입니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듭니다.

30년 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